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예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예원기획 (02-745-8090)

ISBN 978-89-8479-676-8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Contents

요 약	ix
I. 들어가는 말	1
II.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개발 현황	7
1. 개발 전략	9
2. 주요 개발정책 현황	12
가. 극동 및 자바이칼(Far East and Zabaikal)	
지역 개발 프로그램	12
나. 동시베리아-태평양(East Siberia Pacific Ocean: ESPO)	
송유관 프로젝트	15
다. 철도 및 교통 전략 프로젝트	21
라. 블라디보스톡 <APEC-2012 정상회담>과 지역 개발	25
III.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환경 조성 및 남-북러 협력사업	31
1. 북러 관계 변화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정치 환경 조성	33
가. 푸틴 시기(2000.5~2008.5)	33
나. 메드베제프 시기(2008.5~2012.5)	41
2.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유입과 북러 간 경제협력	46
가. 중국 노동자 유입에 따르는 안보위협과 북한 노동자의 선호 ...	46
나. 북한 노동자 유입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52
다. 주요 도시별 북한 노동자 진출 현황	59
3.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을 위한 환경 분석	71
가. 한국-러시아 경제관계와 러시아 극동지역	71

나. 3자 협력 사업에 대한 3국의 입장	75
다. 푸틴 3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3자 협력 환경	80
IV. 한국의 정책적 고려	87
1. 국가 주도의 3자 간 경협 틀 구축	89
2. 민간 주도에 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94
3. 북한 노동자에게 자본주의 체험 기회 보장	97
4. <한민족 공동체> 건설과 통일 환경 조성	101
V. 끝맺는 말	107
참고문헌	11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9

표·그림 목차

Contents

〈표 II-1〉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주요 발전 프로그램	11
〈표 II-2〉	연해주의 주요 개발사업	29
〈표 III-1〉	북러 간 정상회담 현황	34
〈표 III-2〉	올란우데 북러 정상회담	41
〈표 III-3〉	러시아 극동지역 인구 현황	47
〈표 III-4〉	2004년 분야별 연해주 외국인 노동자 수	48
〈표 III-5〉	2004년 국가별 연해주 외국인 노동자 수	49
〈표 III-6〉	푸틴 집권 2기, 연도별 북한 노동자 수	57
〈표 III-7〉	알타이 크라이의 건축 전문학교에서 교육 이수(2010년 10월)	58
〈표 III-8〉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수 및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율(%)	60
〈표 III-9〉	블라디보스톡시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1인당 상납 금액 ..	62
〈표 III-10〉	〈북-러 무역경제협력 펀드〉에 의해 나호트카시 건설 현장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	64
〈표 III-11〉	하바롭스크주의 북한 노동자 수와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율(%)	68
〈표 III-12〉	한국의 대(對)러시아 교역 추이	71
〈표 III-13〉	연도별 한국의 대(對)러시아 직접투자 추이	72
〈표 III-14〉	한국의 대(對)러시아 경제관계와 3자 경제협력 변수	74
〈표 IV-1〉	남·북러 3자 협력사업과 한국 정부의 역할	93
〈표 IV-2〉	민간 주도에 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전략	95
〈표 IV-3〉	북한이탈주민 현황	98
〈표 IV-4〉	한민족 공동체 건설과 통일 환경 조성 체계도	104



〈그림 I-1〉 동부러시아(시베리아 및 극동지구)	3
〈그림 II-1〉 극동연방지구	9
〈그림 II-2〉 ESPO(East Siberia Pacific Ocean) 송유관 노선도	18
〈그림 III-1〉 원동림업대표부 전경(하바롭스크 소재)	69



요약

러시아는 자신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전략 2030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는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 프로젝트, 연해주를 비롯한 블라디보스톡시(市) 발전 프로그램,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Far East and Zabaikal Region) 개발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톡시(市)를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의 중심지로 육성하려 한다. 블라디보스톡 공항 현대화 사업, 루스키섬(Остров Русский) 개발사업,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석유화학단지 및 조선업 발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운송(철도·도로·항만), 광물·임업·농업·어업 관련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가 자신의 극동지역을 개발하려 하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지역개발에 따르는 자원조달 문제,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문제, 그리고 개발 이후 동일 지역이 아·태 경제권에 포함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원조달 문제는 동북아 주요 국가의 참여 유도로 해결하려 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는 중국 및 북한 등 구사회주의 형제국들의 노동력을 유입하면서 해결하려 한다. 블라디보스톡시(市) 일대에 다양한 산업 및 문화시설을 구축하여 아·태 경제권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 한다. 북한과의 관계는 지역안보와 북한노동력 유입, 그리고 북한을 통한 한국의 투자유치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3자 협력사업 문제가 논의되었다. 러시아는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으로 가스관 부설, TKR/TSR 연결, 송전선 건설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3자 간 공통

관심사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건설, 어업, 산림, 그리고 운송관련 영역이다. 한국은 3자 협력 사업을 통일 환경 조성의 문제와 연계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러시아 진출 지역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중되어 있지만, 러시아의 동부 지향성에 주목하면서 극동지역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다수가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선호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극동 진출은 현지와 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 환경 조성 차원에서 그러하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북한 노동력에 기초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하바롭스크주, 연해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등에 파견되어 현지의 삼림, 건설, 농업 관련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대대적으로 유입되면서 극동지역 시장과 자원을 독점해 가고 있다. 러시아의 동부지역이 중국의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베리아 없는 러시아>가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 현장에 북한 노동자 유입을 선호하고 있다. 근면한 북한의 노동자들이 <극동지역의 중국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음에 기인한다.

중국 노동자들이 극동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현지의 북한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추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에 파견된 북한 동자들은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바사예프(С.Басаев)의 지적처럼, <시베리아에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벌목 노동자들의 일부는 북한 감독기관과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현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직시하면서, 한국의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극동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보안 요원들의 감시를 피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들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 신청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남·북·러 3국 간 또는 양자 관계가 미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발견된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지속성을 지닌 협력정책으로 수정되고, 북한을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정책적 사고와 함께 시작된다.

첫째, 남·북·러 3자 간 공동 관심사에 기초된 3자 간 외교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3자 간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은 3자가 원하는 영역을 모색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련 해체 이후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가 한반도 2개의 정부와 체결한 각종 협력 협정을 중에서 경제관련 협력 협정을 분석하면서, 상호 간 필요한 영역에서 3자 간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문하려 한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경제관련 협력 협정은 농업, 어업, 임업 등을 포함하는 경공업에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협력 대상 공간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이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에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외교 문건들 중에서 경제 관련 협력 협정에는 에너지, 철도, 삼림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3자 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3자 간 협력 협정 체결은 한민족(한국 및 북한 주민, 현지 고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적 준거 틀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서울과 평양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소통의 교통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자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정부가 별도로 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 3자 간 협력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에너지 협력, 철도 및 송전선 연결 사업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 휴전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둘째, 민간 주도에 의한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동일 지역으로 북한 노동력이 파견되고 있음을 보았다. 북한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종합건설 영역을 비롯하여, 임업·어업·농업·광산업 등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매개로 한 협력을 제안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 다수가 파견된 지역인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그리고 아무르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3자 간 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국내의 민간 기업체가 진출하면서 서울과 평양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주체세력은 국내의 대학 부설 연구기관(혹은 NGO) 또는 민간 기업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이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국가는 협력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구축 작업에 역점을 두면서, 관련 기업체를 지원하여 북한 노동자와 협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간접적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종합건설, 농업, 산림, 수산 등에 관련된 국내 기업체가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3자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협력의 틀을 구축해 주는 것이고, 개별 민간 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노동자에게 한국식 자본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서 이탈하는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수용해 오고 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수용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탈북 노동자들을 한국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제3국(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시장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주의 이식은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체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국 정부는 남·북·러 3자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이러한 환경적 토대 위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체가 현지로 진출하면서 3자 협력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회사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한국식 자본주의 문화를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북한 노동자들의 자본주의 체험은 장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조급하게 추진되는 북한이탈주민 수용 정책이 낳는 문제점(남북관계 악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부적응 및 재탈출 현상 등)을 극복하면서, 남과 북의 묵시적 협력 하에서 추진되는 극동지역에서의 자본주의 이식 사업이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더 긍정적일 것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자본주의 교육은 통일 사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민족 공동체(가칭)>를 건설하면서 통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고려인, 북한 기업체 및 파견 노동자, 한국 기업체(직원) 및 유학생 등 다양한 목적의 체류자들이 섞여 있다.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조건이 된다. 통일 운동에 북한 기관 및 파견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에서의 노동 현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이 북한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는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모델로 발전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통일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통일 한반도의 북방 진출로를 모색하는 데도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 물론, <한민족 공동체>의 현실화 작업은 극동지역 전문 연구소나 NGO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면 러시아와 북한이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I. 들어가는 말

국제정치 및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되면서 러시아는 자국 영토의 아시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¹ 2000년 11월 푸틴(Vladimir Putin)은 브루나이(Brunei) <APEC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에 앞서 <아시아, 동방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아시아 정책에 박차를 가하려 했다.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뒤따르지 않았고, 동부러시아² 지역의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서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遲遲不進)했다. 그리고 2006년 10월의 제2회 극동국제경제포럼에서 이샤예프(V. Ishaev) 하바롭스크 당시 주지사는 지금의 동북아는 빅(big) 3국가(일본·중국·한국)와 주변지역(몽골·북한·러시아 동부)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언급하면서, 빅3가 자본·기술·생산설비·서비스를 독점한 반면, 동부러시아는 이들을 위한 자원 공급처 노릇만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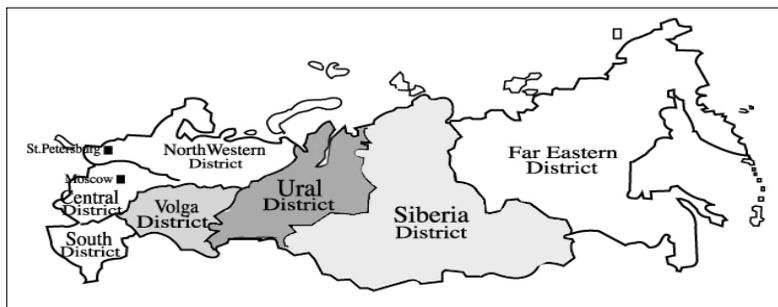


그림 | -1 | 동부러시아(시베리아 및 극동지구)

1. 러시아 영토의 유럽에서 아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어지는 1/3지점에 우랄산맥이 있다. 우랄산맥이 있는 예카테린부르크시에서 멀지 않는 지점의 우랄산맥에 굽은 선으로 그려진 경계선이 보인다. 그 경계선의 서쪽을 유럽으로, 그리고 동쪽을 아시아로 표기해 두고 있다.
2. 본 글에서 사용되는 <동부러시아>는 우랄산맥 이동인 러시아의 동부지역을 의미하며, 러시아 정부에서 구획한 <시베리아연방지구>와 <극동연방지구>를 포함한다.

러시아는 200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여 아·태지역으로 에너지 수출시장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 했다. 이와 함께, 동일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을 새롭게 보완 및 확충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뒤 따랐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은 자신의 에너지 정책 및 2012년 9월 개최된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서의 <APEC 정상회담> 준비 사업이 함께하면서 보다 강력히 추진되기 시작했다.³

푸틴에 이은 메드베제프(Dmitry Medvedev)의 러시아는 경제 재건이라는 국내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아·태의 거대시장에 자신을 편입시켜 유라시아 강대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자신을 아·태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되었고,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발 움직임과 함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지역 개발에 따르는 자원조달 문제,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문제, 그리고 개발 이후 동일 지역이 아·태 경제권에 포함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달 문제는 동북아 주요 국가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로 해결하려 했고, 노동력 부족 문제는 중국 및 북한 등 구사회주의 형제국들의 노동력을 유입하면서 해결하려 한다. 블라디보스톡시(市) 일대에 다양한 산업 및 문화 시설을 구축하여 아·태 경제권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 했다. 북한과의 관계는

3.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시에서 시작된 <APEC 정상회담>은 9월 8~9일 회의를 거쳐 9일 공식 폐막되었다.

지역안보와 북한 노동력의 극동지역 유입, 그리고 북한을 통한 한국의 투자 유치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북한 노동자의 역할, 그리고 한국의 정책적 고려 사항을 모색하는 데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상황을 개괄하면서 지역 개발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의 역할을 모색해 보려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견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 현황을 조사하고,⁴ 북한 노동력 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북·러 관계가 한국 정부에 주는 정책적 메시지를 모색해 보려 한다. 본 글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자 파견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진단하는 것으로 한다.

본 글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북한 노동자, 북·러 관계, 남·북·러 3자 간 경제협력 등을 키워드(Key Words)로 해서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고려 사항을 모색한다. 극동 현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는 러시아 정부 및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이를 통해 북·러 간 협력 관계를 평가한다. 북·러 협력 관계를 노동자 변수에 기초해서 판단하려는 시도는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러 관계의 변화 상황 파악 역시 한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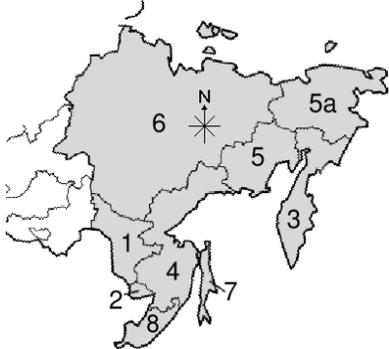
4.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며, 상당수의 불법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Ⅱ.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개발 현황

1. 개발 전략

러시아의 개발정책은 동부러시아(시베리아연방지구 및 극동연방지구) 전체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보다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극동연방지구이다. 이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 및 교통전략 등은 동부러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되고 있지만, 그러한 개발정책이 모여지는 중심지는 극동지역이다. 따라서 극동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 시베리아 지역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극동지역 개발전략을 개괄하기로 한다.⁵

	<p>면적: 6,169.3천 km² 인구: 6440.4천명(2010년 1월) 본부: 하바롭스크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무르주 2. 유대인 자치주 3. 캄차트카 크라이 4. 하바롭스크주 5. 마가단주 5a. 추코트카 자치구 6. 사하 공화국 7. 사할린주 8. 연해주
<p><http://ko.wikipedia.org/> (검색일: 2012.3.19).</p>	

Ⅱ 그림 Ⅱ-1 Ⅱ 극동연방지구

5. 러시아 극동연방지구에는 3개의 크라이가 있다. 캄차트카 크라이, 하바롭스크 크라이, 그리고 연해 크라이가 그것이다. 러시아의 행정 명칭인 '크라이'를 한국에서는 '크라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주'로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하바롭스크주', '연해주'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개발정책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⁶ 그러나 지역개발정책이 환경문제에 봉착되어 주춤하기도 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경제적 필요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시 메드베제프의 중앙정부는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 개발과 아태 경제권으로의 편입이라는 당명 과제에 직면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개발정책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주요 중장기 개발 계획으로 에너지 분야 발전 계획인 «에너지전략 2020»과 이를 보완한 «에너지전략 2030»이 있고, 국방 및 군수산업 분야 개혁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 사회 발전»⁷ 등 다수의 발전 프로그램이 있다. 2008년 메드베제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개발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2012년 9월에 개최된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준비사업과 연해주를 비롯한 블라디보스톡시 발전 프로그램,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Far East and Zabaikal Region) 개발 프로그램, 교통전략 2030의 본격화 등이 대표적인 개발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제3기 푸틴 정부가 들어선 현재에도 그러한 개발정책이 진행 상태에 있다.

러시아는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과 별도로 교통전략과 에너지전략을 통해 철도와 도로는 물론 송유관과 가스관, 그리고 전력 송전선 등의 통합시스템을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 생산과 수출을 위해 원전과 수력발전소 건설

⁶- Глушкова В.Г., Симагин Ю.А., *Федеральные округа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Москва: КНОРУС, 2009).

⁷-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года."

등 에너지와 물류를 연계하는 사업을 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운송(철도·도로·항만) 및 에너지 자원 개발 그리고 광물·임업·농업·어업관련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블라디보스톡 지역 개발이 중심을 이룬다. 이들 개발사업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 표 II-1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주요 발전 프로그램

발전 프로그램	비고
블라디보스톡시 발전 프로그램	• 2012년 <APEC 정상회담>에 맞추어 블라디보스톡 지역 개발
철도수송발전전략 2030	• 2015년까지 기존 철도 개량에 역점, 2016~2030년까지 1만 5,800km의 철도 신설
에너지 전략 2030	•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필요성 강조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비아칼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 2007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승인(APEC 정상회담 개최지인 블라디보스톡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임; 송유관 등 연료 및 에너지 관련 시설 건설, 도로 건설을 포함한 교통망 건설, 공항, 항만 개·보수 작업 포함)
에너지통합공급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 석유·가스·전력, 통합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동시베리아·태평양(East Siberia Pacific Ocean: ESPO) 송유관 프로젝트	• 2009년 12월 ESPO송유관 중 1단계 구간(이르쿠츠크주의 <타이세트>에서 아무르주의 <스코보로디노>까지) 과 블라디보스톡 인근의 코즈미노(Kozmino) 원유수출 터미널 완공
교통전략 2030	• 한반도철도와 연결되는 사업 포함 (2012년까지 라진-하산 철도연결공사 완료, 2030년에 TSR/TKR 연결공사 완료)

중앙정부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정책 의지와 함께 지역개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 프로그램 과제 달성율이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지만 푸틴 집권 2기 이후 과제 달성율이

조금씩 상승되었고, 2013년까지의 중기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확충이 연방정부 부담으로 대폭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의 달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연료 및 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을 위한 균형적인 개발과 지역단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전략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톡시를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의 중심지로 육성하려 한다. 국제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가 아·태로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동부지역을 개발하여 이러한 질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한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극동러시아 개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함께 신설된 극동개발부가 지역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2. 주요 개발정책 현황

가. 극동 및 자바이칼(Far East and Zabaikal) 지역 개발 프로그램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바이칼 호수 주변을 포함하는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은 극동연방지구 전체와 극동연방지구의 서남부에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시베리아연방지구의 일부(부랴티야 공화국, 자바이칼 크라이⁸⁾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러시아 전체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일 지역은 면적이 광활한 데 비해 인구가 적으며, 극한의 기후

조건으로 인해 교통, 통신 등 제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반면, 임산 및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상업성이 높은 70여종의 광물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지난날의 러시아는 우랄산맥 서부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다. 동부지역에 포함되는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은 중앙정부의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동일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한 개발 프로그램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 의지가 따르지 못했다.⁹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풍력, 지열, 수력 등의 에너지원, 임산자원, 수자원, 농업·목축업 자원, 북태평양(베링해, 오호츠크해, 동해)의 수산자원 등이 풍부하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높은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 및 자바이칼지역 개발 프로그램은 몇몇 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중앙정부가 2007년 8월 2일 4,260억 루블(\$168억)의 연방 예산을 투입해 동부러시아를 개발하기 위한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개발 프로그램은 1996년에 처음 채택되었으며, 그 후 동시베리아/바이칼 지역이 포함되어 2010년까지 동일 지역의 사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2007년에 블라디보스톡시가 2012년 가을 <APEC 정상회담> 개최 도시로 확정되면서 2007년 11월 21일 기존의 연방프로그램을 연장하여

8. 2007년 7월 21일의 연방법에 따라 기존의 치타주와 아가 부랴트 자치구가 통합되어, 2008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연방 주체인 자바이칼 크라이(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가 형성되었다.

9. 고르바초프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가 아태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극동·자바이칼지역의 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을 수립했지만, 소련의 해체로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고 1990년대 엘친의 개발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한 상태였고, 2000년대 푸틴의 프로그램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연방 특별 프로그램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동일 프로그램은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 블라디보스톡시 발전» 프로그램의 현실화와 함께 7만 9천 7백 개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 인구 수 1.05배 증가, 지역총생산 2.2배 증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⁰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 러시아를 2013년까지 아 태지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시 극동연방지구의 대통령 전권대표로 활동하고 있던 이스하코프(K.Iskhakov)¹¹가 공개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2013년까지 4,260억 루블(\$168억)을 투입해 6,600km의 도로와 8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며, 17개의 공항, 10개의 항만, 8개 병원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08년에 300억 루블(\$12억)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였고, 극동러시아 개발 국가위원회(위원장: 총리)가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했다.¹² 그리고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러시아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극동지역에서 국제경제포럼을 주최하면서 동일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 한다. 2009년 9월 8일 개최된 극동 경제포럼에 참석한 러시아 및 13개국 해외 대표단은 <2025년까지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 발전전략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동 프로그램은 3단계로 나뉘지며 사회 인프라 개발, 산업 현대화, 산업기술 및 기존 생산시설 현대화, 새로

¹⁰ <<http://www.roszeldor.ru>> (검색일: 2012.2.1).

¹¹ 이스하코프(Iskhakov)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역임했다.

¹² 박기원, “러시아, 2013 극동러시아 개발프로그램 채택 - 2013년까지 168억 달러 정 부예산 투입 -,”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의 2007년 8월 3일의 보고서 참조.

운 경제부문 발전, 혁신기업 발전 기반 구축 및 지방혁신 센터 설립, 테크노 파크 구축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은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 인구감소와 불법 이주 노동자 문제, 생태환경 문제, 범죄와 부정부패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동시에 물류와 에너지 운송, 그리고 자원개발을 통한 아·태 시장으로의 편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개발 프로그램에는 교통과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우선시 되었고, 블라디보스톡시 등이 특화된 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발 프로그램은 과거의 연방프로그램과 달리 예산 증액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동시베리아-태평양(East Siberia Pacific Ocean: ESPO) 송유관 프로젝트

푸틴은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가스관 및 앙가르스크(Angarsk) 송유관 사업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사업을 경제적 관점 이외에 전략적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03년 중순, 러시아의 시베리아 동부 유전인 앙가르스크 송유관 노선의 동단(東端)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중국은 바이칼호 인근 앙가르스크 유전의 원유를 앙가르스크에서 중국 흑룡강성 다칭(Daqing)으로 연결하는 송유관을 희망했다. 반면에, 일본은 앙가르스크에서 나호트카(Nakhodka)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희망했다. 앙가르스크-나호트카 송유관은 부랴트 공화국·이르쿠츠크주·치타주·아무르주·하바롭스크주·연해주 등을 가로지르는 길이 약 3,765km의 송유관 건설을 일컫는다.

러시아는 2003년 8월 «에너지전략 2020»을 발표했다. «에너지전략 2020»은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국내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인근 지역으로 에너지를 공급 및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특별한 지리적 및 지정학적 입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에너지전략 2020»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의 유럽시장 편향을 탈피해 아-태지역으로 수출을 늘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전략 2020»은 2005년 현재 러시아의 석유 수출에서 3%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비중을 2020년까지 최대 30%(1억 톤)까지 높이고, 천연가스는 현재의 5%에서 25%(650억 m^3)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³ 따라서 향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유망한 송유관 프로젝트의 실현, 러시아 동부지역에 새로운 석유-가스 산지의 개발 및 운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촉진, 현행 정유공장의 현대화, 응축가스 생산의 발전 및 수출 증대,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발전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¹⁴

러시아는 2004년 12월 31일 타이셰트(Taishet)~나호트카(Nakhodka)를 연결하는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코빅타(Kovykta) 가스전을 포함하여 앞으로 건설될 시베리아의 모든 가스관과 송유관을 하바롭스크~나호트카 노선으로 단일화시키기로 결정했다. 가스관 노선 변경은 시베리아 송유관 노선이 나호트카로 향하는 극동라인으로 굳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당초 시베리아 가스관과 비슷한 노선으로 중국 쪽으로 건설될 예정이었던 송유관이 극동지역으로

¹³- *Vedomosti*, No. 19, February 6, 2006.

¹⁴- 이재영,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협력 방안,” 고재남·엄구호 엮음,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9), p. 321.

결정된 것이다. 송유관과 가스관을 나란히 건설하면 건설 경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송유관을 따라 가스관 노선도 바뀐 것이다.

푸틴 정부는 2005년 에너지 공급 대상국의 다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과 중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노선을 채택했다. 즉, 송유관을 타이셰트에서 블라디보스톡시 인근의 페레보즈나야(Perevoznaya)까지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하되 중국행 지선을 1단계 공사 종착점인 스코보르디노(Skovorodino)에서 다칭으로 연결하고, 2단계 공사에서 스코보르디노에서 페레보즈나야까지를 연결하는 내용이었다. 2005년 9월 푸틴은 <극동원유 송유관>은 타이셰트에서 나호트카에 이르는 송유관이 될 것이며, <타이셰트-나호트카 송유관> 제1단계에 타이셰트로부터 연 3,000만 톤의 원유가 수송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중 2,000만 톤은 지선을 통해 중국의 다칭으로 수송될 것이고, 나머지 1,000만 톤은 철도를 통해 나호트카 항에 도달할 것이라 했다.

2006년 4월에 착공된 동시베리아 태평양(ESPO) 송유관 프로젝트는 총 \$295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르쿠츠크주의 타이셰트 지역에서 연해주의 코즈미노 항까지 약 4,800km에 이르는 송유관 건설 사업이다.¹⁵ 환경문제 등이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ESPO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단계 공사 구간(이르쿠츠크주의 <타이셰트>에서 아무르주의 <스코보르디노(Skovorodino)>까지)과 블라디보스톡시 인근의 코즈미노(Kozmino) 원유수출 터미널이 2009년 12월 완공되었다. 이러한 시기인 2009년 11월 13일 «에너지전략 2030»이 최종 확정되었다.¹⁶ «에너지전략 2030»은 지금까지 등한시해 온 동시베리아와 극

15. ESPO 전체 길이가 4,857km(제1단계 구간 2,757km, 제2단계 구간 2,100km)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https://www.platts.com/IM.Platts.Content/>> (검색일 2012.9.20.) 참조

16. <에너지 전략 2020>의 연장선상에서 정리된 <에너지 전략 2030>의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 에너지부 참조 <<http://minenergo.gov.ru/activity/energostrategy/>>.

동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및 탐사를 수행할 경우, 2030년까지 석유는 120억 톤(880억 배럴), 천연가스는 최소 16조^m 이상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지도상의 동해(East Sea)는 출처인 www.platts.com에서 일본해(Sea of Japan)로 표시된 것을 필자가 수정한 것임.

출처: <<https://www.platts.com/IM.Platts.Content/InsightAnalysis/IndustrySolutionPapers/espoupdate0510.pdf>> (검색일: 2012.9.20).

|| 그림 ||-2 || ESPO(East Siberia Pacific Ocean) 송유관 노선도

완공된 ESPO 1단계 구간인 타이셰트부터 아무르주의 스코보로디노 지역까지 에너지가 수송되고 있다. 미완공 구역인 스코보로디노에서 코즈미노 향까지는 TSR(Trans Syberian Railroad)을 이용해 원유를 수송하고 있다. ESPO 송유관 1단계 공사 구간에 부설된 파이프라인의 총 연장은 2,700km이며, 수송능력은 60만b/d(연간 3,000만 톤)이다.¹⁷

¹⁷- <<http://www.emerics.org/posts/postPrint/1/1257131/HR.do>> (검색일: 2011.4.22).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코즈미노 원유수출터미널은 최대 15만dwt급 유조선이 정박할 수 있고, 일일 처리 능력이 30만b/d에 달한다. 코즈미노 원유터미널에는 원유수출을 위한 항만시설과 주변에 트란스네프트(Transneft) 소유의 원유 저장 시설이 건설되었다. 총 7개의 저장 탱크가 있으며, 1개의 원유 저장용량이 5만m³이기 때문에 전체 원유 저장 용량은 35만m³이다. 이러한 저장 시설에 저장된 원유는 코즈미노 터미널에 정박되어 있는 유조선으로 보내어진다. ESPO 송유관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서, 러시아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원유가 극동지역의 코즈미노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유조선을 통해 아 태지역으로 공급이 시작되었다.¹⁸

2010년 8월 현재 ESPO 1단계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의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코즈미노 항을 통행 수출된 ESPO유의 39%를 한국 시장이 차지했으며, 일본, 중국, 태국, 타이완, 미국이 각각 20%, 11%, 8%, 4%, 14%를 차지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ESPO를 통해 아 태지역으로의 원유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¹⁹ 러시아는 ESPO를 통해 운송되는 석유 수출량을 증가시켜, 아 태지역 내의 수출 노선 다변화와 그를 통한 영향력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낙후된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SPO 2단계 구간(<스코보로디노>에서 <코즈미노> 터미널까지) 공사 역시 2,100km에 이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ESPO 2단계 구간인 스코보로디노에서 코즈미노 항까지의 구간과 스코보로디노에서 중

¹⁸- ESPO Blend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

¹⁹- <<http://www.emerics.org/posts/postPrint/1/1257131/HR.do>> (검색일: 2011.4.22).

국으로 향하는 중국 지선은 건설 중에 있다. 2010년에 스코보로디노 지역부터 코즈미노 향까지 파이프라인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토크레프(N.Tokarev) 트란스네프트사 사장이 2008년 11월 푸틴 총리와와의 면담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ESPO 2단계 사업이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 완공될 예정이다. 현 시점에서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에 있지만, 2014년으로 예정된 ESPO 2단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면 최대 160만b/d(연간 8,000만 톤)의 원유가 러시아 동부지역과 동북아 지역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²⁰

ESPO 2단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트란스네프트가 동시베리아의 원유를 스코보로디노에서 코즈미노 터미널까지 TSR을 이용해 운송하게 된다.²¹ 2010년 현재 동부러시아(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내 여러 유전들에서 하루 약 35.5만 배럴 정도가 ESPO 송유관 1단계 구간에 공급되고 있는 데, 그 중 일부 물량이 TSR을 통해 코즈미노 수출터미널까지 운송되어 여기에서 유조선을 통해 아태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²²

한편, 사할린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는 사할린 지역과 극동지역 본토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통해 하바롭스크 지방 내 데카스트리(De Kastr) 석유 수출터미널과 콤스몰스크 정유공장으로 수송되고 있다. 데카스트리 터미널로 수송된 원유는 유조선을 통해 아태지역으로 수출된다. 또

²⁰ 이성규, “ESPO원유공급과 동북아지역 석유시장 형성 전망,” (한국슬라브학회 2010년 추계 정기학술회의, 2010. 9. 30), pp. 3-4 참조.

²¹ 코즈미노 원유선적 터미널 인근에 있는 엘리자로프 만(Cape Elizarov)에 연 2천만 톤 처리규모의 연해주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공사 기간은 2012-201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²² ESPO 원유는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의 Ural유 보다 품질이 좋으며, 중동산 원유와 비교해도 품질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이성규, “ESPO 원유 등장으로 아시아 원유공동시장 가시화,” *Russia·CIS Focus*, 제68호(2010.7.19).

한 사할린-Ⅱ의 필톤-아스토호스코예 유전, 룬스코예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도 해상 매장지에서 사할린 본토를 중횡하여 프리고로드노예(Prigorodnoye) 석유 수출터미널까지 800km 송유관을 통해 보내지고, 이곳에서 아-태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동 송유관은 현재 탐사 단계에 있는 다른 사할린 지역 해상광구에서 생산된 원유도 수송하게 될 전망이다.²³

결국, «에너지 전략 2030»과 ESPO 송유관 건설 사업은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동부지역(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이 동일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보완 및 신규 확충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매장지 주변에 대규모 정제 및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계획 및 추진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현상이 그동안 유럽 국가로 인식되어 온 러시아를 아-태지역 국가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하고 있으며, 동북아 주요 국가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다. 철도 및 교통 전략 프로젝트

동부러시아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가 빈약하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교통 인프라가 빈약하여 인구 이동과 물류 수송이 그다지 원활하지 못한 것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동부러시아 개발과정은 자연스럽게 지역 내 교통 인프라를 보완하는 작업과 함께 시작된다.²⁴ 광범위하며 다양한 자연 지리적 조건과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

²³ 이성규, “ESPO원유공급과 동북아지역 석유시장 형성 전망,” p. 5.

²⁴ 다양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 교통전략(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에 관련된 문건은 다음을 참조. <<http://www.mintrans.ru/>> (검색일: 2012.2.17).

는 극동지역의 경제 주체들을 통합하면서 주민들의 지역 간 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교통망 구축 사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²⁵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서 교통과 물류분야가 제외된 적은 없었으며, 다양한 개발 문건들이 현재에도 준비되고 있다. 교통과 물류분야의 발전이 극동지역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러시아 중앙정부가 동부러시아 개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던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2006년 6월 23일 러시아연방 교통부와 타타르스탄 공화국 정부의 교통 전문가 공동회의 및 러시아연방 «교통전략2020»의 현실화를 위한 지역적 과제에 관련된 학술회의²⁶가 개최되어 교통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²⁷ 동부러시아 지역의 교통개발관련 대표적인 문건은 «교통전략2020», «교통전략2030», «교통발전전략2010», «철도수송발전전략2030» 등이며, 이들 각각의 발전전략에는 동부러시아 개별지역에 대한 교통발전 문제들이 포함되고 있다.

2007년 8월 27일, 러시아 교통부와 교통관련 기관들은 «철도수송발전전략2030»²⁸과 «2007-2010년과 2015년까지의 운송 기계제작 전략»²⁹에 합의했고,³⁰ 러시아 철도공사가 2007년 10월 24일 모스크바에서 개

²⁵- 러시아 교통부가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 <2010-2030년까지의 러시아 교통망> 관련 지도는 다음을 참조. <<http://www.mintrans.ru/>> (검색일: 2012.2.17).

²⁶- Совместное заседание коллег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и конференция «Региональные задачи реализац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г» 23 июня 2006 года.

²⁷- <<http://www.mintrans.ru/>> (검색일: 2011.3.29).

²⁸-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до 2030 года.

²⁹- Стратегия транспортн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07 - 2010 годах и на период до 2015 года.

최된 연례 총회에서 «철도수송발전전략2030»을 발표했다. «철도수송발전전략2030»은 러시아 교통부와 러시아 철도공사가 공동으로 협의 및 검토한 러시아 철도의 장기 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러시아 철도공사의 자체 발전 전략이 아닌 지역 및 지방 간 협력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연방차원의 발전전략이다.

«철도수송발전전략2030»에 따르면, 2030년까지 13.7조 루블(약 \$5,500억)을 투자하여 신규 철도건설, 기존 철도 개·보수, 철도차량 증량, 철도 교통산업 발전 등을 목표로 한다.³¹ 연방정부의 투자액은 총 투자액의 19.5%인 2.7조 루블(\$1,110억 상당)이며, 전략적이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철도건설에 투자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요금 체계구축, 투자자를 위한 특별 세금정책 수립, 국가소유 주식매각, 관세 부과제도 운영, 철도공사 자산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여건 조성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되고 있다.³² «철도수송발전전략2030»은 두 단계로 나누어 실행된다. 2015년까지는 기존 철도를 개량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는 1만 5,800km의 철도를 신설하게 된다. 2012~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한 모스크바~페테르부르크 구간의 고속철도화 작업도 이번 개발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의 철도현대화 계획은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는 중장기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다. 중국·한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러시아 중앙정부가 자신의 극동지역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철도현대화 프로젝트에는 TSR과 TKR(Trans Korean Railroad) 연계 운행을 포함하여 남한과 북한의 철도를

³⁰- <<http://www.roszeldor.ru/search?query=2030>> (검색일: 2011.3.29).

³¹- 투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규철도건설(30%), 기존 철도 개·보수(24%), 철도 차량증량(23%), 철도 교통산업발전(23%) 등이다.

³²- <<http://www.emerics.org/>> (검색일: 2011.4.22).

연결하는 문제까지 포함되고 있다. 상기의 «철도 발전전략2030»을 비롯한 제반의 지역개발정책은 아·태지역(특히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국제적인 영향력 확장 및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 8월에는 러시아 교통부에서 <2020년까지 바이칼-아무르철도 노선> 발전에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었다.³³ 뿐만 아니라, 하바롭스크 지역을 가로 질러 러시아의 중서부 지역을 잇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바이칼아무르간선(총 연장 2,300km)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다. 이와 함께, 치타-하바롭스크 구간(1,800km)의 자동차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가 계속되어 왔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발전이 극동지역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교통관련 개발정책은 2012년 현재에도 다양한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역의 낙후된 도로 및 철도 등에 대한 개·보수 작업과 함께 신규 공사를 계속하는 등 교통정책이 보다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10월 4~5일 하바롭스크시에서 <2020전략에서 극동의 우선권>(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приоритеты в Стратегии 2020)이라는 제목 아래 제5차 극동국제경제포럼이 개최되었다.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 국가두마 의장, 외무부 장관,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등의 축전과 함께 시작된 금번의 국제경제포럼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시를 비롯하여 시베리아연방지구 및 극동연방지구의 17개 개별행정주체에서 대표자(주지사 등)들이 참여했고, 외국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벨라루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일란드, 핀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정부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회사)의 대표들도 참여했다. 본 포럼에서 <2020전략>에 관련된 천연가스, 교통전략, 사회간접자

33- <<http://www.roszeldor.ru/search?query=2020>> (검색일: 2012.2.17).

본시설, 산업시설 및 생산, 극동지역 경제발전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표되었고, 원탁회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동일 문제들이 논의되었다.³⁴

라. 블라디보스톡 <APEC-2012 정상회담>과 지역 개발

러시아 중앙정부는 블라디보스톡시를 비롯한 인접 지역에 대규모 물류, 학술, 비즈니스, 관광 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도시의 기초 인프라(교통, 에너지, 공공부문)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 블라디보스톡시 발전»³⁵이라는 하위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동 프로그램에 컨퍼런스센터, 프레스센터, 의료센터, 오페라발레극장, 호텔(숙박시설), 교통인프라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에너지 및 공공부문 인프라 시설을 재건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블라디보스톡 <APEC-2012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연해주 일대에서 30~40개에 달하는 준비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다양한 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와 항만 건설 및 개·보수 작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이 실행 및 준비되고 있다. 이들 사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대규모 사업들은 블라디보스톡 공항 현대화 사업, <APEC-2012 정상회담> 관련 종합건설 및 확장 공사, 에너지 개발 사업, 루스키섬(Остров Русский) 개발사업,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석유화학단지 및 조선업 발전 사업 등이다.

³⁴-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www.dvforum.ru/>> (검색일: 2012.2.17).

³⁵- «Развитие г. Владивостока как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첫째, 블라디보스톡 공항 현대화 사업이다. 바사르긴(Basargin) 지역개발부 장관이 APEC 준비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2008년 11월 14~15일 양일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다. 바사르긴 장관은 14일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도착한 후 현장에서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로부터 블라디보스톡 공항 현대화 및 신규 활주로 건설사업 계획을 보고 받았다. 당시 다르킨은 블라디보스톡 공항 현대화 사업은 2009년 하반기에 착수될 예정이며, 최신 공항장비를 갖춘 21세기형 허브 공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러시아연방 항공청이 지난 4월 입찰 공고한 블라디보스톡 공항 현대화 사업의 시공자로 모스크바 소재 인지트란스스트로이(Inzhtransstroy)사를 선정했다.³⁶ 공항현대화 사업에는 활주로 재건, 조명시그널 장비교체, 공항내부도로 재건, 대형항공기 계류장 확장, 무선장비 현대화, 신규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둘째, 루스키섬 연륙교 건설을 비롯한 <APEC 정상회담> 장소 및 부대시설 건설 사업이다.³⁷ 2008년 12월 3일 러시아 정부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개최지인 루스키 섬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³⁸ 동 개발 계획은 총 2,800ha의 부지에 일반 시설 및 호텔·비즈니스 구역, 공공시설 구역, 저층건물 구역 등의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관련 시설물이 건설될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APEC 정상회담> 행사가 종료된 후, 루스키섬 일원이 극동연방대학교의 캠퍼스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푸틴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2010년 3월 31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루스키섬에 경제특구(SEZ)가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APEC 정상회

36. 인지트란스스트로이(Inzhtransstroy)사는 공항, 철도, 터널, 교량, 항만 등 교통시설 전문 시공업체로 공항 활주로 건설, 조명시설 설치 등의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이다.

37. 2012년 8월 11일의 RIA Novosti 통신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톡시와 APEC 회담 장소인 루스키 섬을 연결하는 2.1km 거리의 Golden Horn(Золотой Пор) 연륙교가 11일 개통되었다.

38. 루스키 섬은 블라디보스톡 남부 8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담> 준비에 따른 교량, 도로, 에너지 관련 시설 등 관련 인프라 시설의 확충을 활용해 루스키 섬을 관광레저특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셋째, 연해주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이다. 연해주 정부는 <APEC 정상회담> 시설물 및 대(對) 주민 전력공급용량 확충 차원에서 루스키 섬과 포포프 섬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동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루스기드로(RusGidro)사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되었다.³⁹ 2012년까지 40MW의 전력(블라디보스톡 전력공급의 15%)을 생산할 계획이다. 물론, 연해주 해안의 풍력 잠재력은 블라디보스톡 전력 공급의 최대 4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루스기드로(RusGidro)사의 주바킨(V. Zhubakin) 사장은 연해주 해안의 풍력 잠재력을 감안할 경우 2015년까지 발전 용량을 약 200MW 규모로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연해주 가스 사업이다. 연해주 정부와 가스프롬이 2007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블라디보스톡시와 연해주 일대의 가스화 사업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2009년 1월 사포노프(Vadim Safonov) 대통령 전권대표의 승인으로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 건설 사업을 시행·조정하는 시행 본부를 설치했다.⁴⁰ 사포노프 전권대표의 지적처럼,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 건설 사업은 동부러시아 통합가스공급시스템 조성의 근간이며,⁴¹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사회개

39. 루스기드로(RusGidro)사는 러시아 최대(수력발전 부문 세계 2위) 발전 회사로 극동 지역 부레야 수력발전소, 제야 수력발전소, 캄차카 지열발전소 등을 포함하여 러시아 내에 55개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전력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조력,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두 기업이다.

40. 시행 본부는 사포노프 전권대표를 본부장으로 한다.

41. 최근 사할린에서 하바롭스크로 연결되는 502km 길이의 이스턴 라인(Eastern Line) 가스 파이프가 4년 만에 완성되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등 연해주 전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 한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지 가스와 전력을 수출하려는 전략도 갖고 있다. 이 사업의 주관사인 가스프롬은

발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이다.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시설물에 대한 가스공급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가스관 건설 사업이 최대의 당면 과제라고 인식되기도 했다.

다섯째, 석유화학단지 조성 계획이다. 로즈네프트(Rosneft)사가 파르티잔스크 지역(나호트카시 인근)에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 석유화학단지의 총사업비는 약 \$220억으로 추정되며 운영 시 3,500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생산품은 디젤유, 항공유, 석유화학 제품으로 향후 아·태지역 국가로 수출될 전망이다. 석유화학단지 건설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2017년 까지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완공할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유공장 건설이 아니라,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섯째, 조선업 발전 계획이다. 푸틴 총리는 지난 2009년 5월 11일 하바롭스크주의 콤소몰스크-나-아무레(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시를 방문하여 조선업 발전에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연해주 가스화 사업 및 <APEC 정상회담> 준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푸틴은 극동 지역 조선업계의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극동지역 조선업 진흥을 위해 관계자들이 진력(盡力)해 줄 것을 당부했다.⁴² 이와 함께 각종 선박이 건조되어야 하며, 선박 노후화 상태를 개선하여 수산물 생산량의 증대를

극동지역에서 2020년까지 6개의 가스전, 17개의 압축시설, 1개의 가스정련 공장, 2개의 헬륨 저장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⁴² 푸틴은 극동지역의 조선회사가 당면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선 및 선박 수리업 인프라의 대대적인 현대화 추진; 경쟁력 있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생산 준비;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 국경수비대 함정 등 군용 선박 수리서비스 제공(극동조선센터에 국방부 산하 선박수리소 포함); 선박건조 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을 언급했다.

강조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극동지역 조선업 발전을 위해 즈베즈다(연해주) 및 소브가반(하바롭스크) 조선소 프로젝트를 전략 사업으로 검토 및 준비하고 있다.

표 II-2 연해주의 주요 개발사업

주요 사업	현황	비고
블라디보스톡 공항 현대화 사업	• 사업의 시공자로 모스크바 소재 인지트란스트로이(Inzhtransstroy)사가 선정	• 시간당 승객 1,500명 입출국 가능한 여객터미널 건설, 대형 항공기 계류장 신설, 기존 활주로 개·보수 및 신규 활주로 건설, 공항내부 도로개량사업 등
루스키섬 개발사업	• 블라디보스톡시에서 APEC개최지인 루스키섬으로 이어지는 연륙교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행사 장소 및 관련 부대시설 조성 사업	
블라디보스톡 오페라 발레 극장 건설	• 2010년 11월 현재, 준비 작업이 끝나고 건물 기초설치가 시작됨. • 2012년 9월의 <APEC 정상회담> 시작 전 완공 예정	• 오페라·발레 극장은 <APEC 정상회담> 준비차원의 구조물 중 가장 복잡한 작업 중 하나
연해주 풍력발전소 계획	• APEC 정상회의 시설물 및 주민 전력공급용량 확충 차원에서 루스키 섬과 포포프 섬에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	
연해주 가스사업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 건설)	• 연해주 정부와 가스프롬이 블라디보스톡(루스키섬 포함)과 연해주 가스화 사업 준비 • 2009년 1월,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 건설 사업을 시행·조정하는 시행본부 설치	•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 건설 사업은 러시아 동부 통합가스공급시스템 조성의 근간이며,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사회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

주요 사업	현황	비고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즈네프트(Rosneft)사가 파르티잔스크 지역(나호트카시 인근)에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석유화학단지 건설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2017년까지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완공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유 공장 건설이 아니라,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조선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총리, 극동지역 조선업계의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선박 노후화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0년에 이르러 러시아 수산물 생산량이 1/3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Ⅲ.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환경 조성 및 남·북·러
협력사업

러시아 극동지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극동지역과 인접된 동북아에서의 정치 안정이 필요했고, 지역 개발을 위해서 수많은 노동력이 유입되어야 했다. 러시아 극동지역을 위한 개발 환경 조성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도했다.

1. 북러 관계 변화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정치 환경 조성

러시아가 북한에 접근하는 이유는 북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가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아·태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가. 푸틴 시기(2000.5~2008.5)

푸틴이 집권하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러시아는 자신의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동북아(특히 한반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확보는 물론이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 했다. 러시아의 아·태 정책은 자신의 극동지역에서 출발하며, 그 중심에 북한 변수가 있다.

2000년 2월 북한과 러시아는 새로운 우호 조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단절된 양국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00

년 7월(19~20일) 푸틴의 북한 방문을 전후한 시기에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와 연방의회(상원)가 지난 2월 북한과 체결했던 『친선, 선린 및 협조 조약』을 비준했다.⁴³ 북한이 2000년 4월, 그리고 러시아가 7월에 각각 본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우호협력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안보조약 체결과 함께, 2000~2002년 동안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양국관계를 개선시켰다. 3차례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이 제외된 적은 없었다.

● 표 III-1 북·러 간 정상회담 현황

일시	장소	양국 관계 협력	러시아의 위상
2000.7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 및 경제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경제관계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틴, 김정일로부터 미사일 개발 계획의 조건부 포기 의사를 이끌어 내면서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역량 강화
2001.8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부문 합작 기업 및 TKR-TSR 연결 사업에 관련된 사업 논의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필요한 안보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한반도) 현안 문제에 러시아의 참여 폭 확대

43. 양국 간 체결된 신조약에 따르면, 쌍방 중 일방이 침략 당할 위기상황에 봉착할 경우에,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에 쌍방은 즉시 접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쌍방은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체결된 『친선, 선린 및 협조 조약』(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의 원문 및 번역문은 다음을 참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 9(2000), pp. 5-6; *Бюллетен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 No. 4(2001), pp. 51-53; 이영형, 『조선/북한/한국과 구(舊)소련/러시아 간 주요 외교자료집. 1884-2001년 12월 자료』(서울: 엠에드, 2002), pp. 406-407.

일시	장소	양국 관계 협력	러시아의 위상
2002.8	블라디보스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임업·어업·농업·건설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 논의. TKR-TSR 연결 사업을 비롯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ABM조약 탈퇴와 MD체제 구축 강행에 반대 입장 공유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토대 재확인 푸틴, 정상회담에서 철도연결 사업을 최우선 의제로 제기(한반도에서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사업이 실현 단계,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첫째, 2000년 7월 19~20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북한·러시아 공동선언>(평양선언)을 발표했다.⁴⁴ 평양선언은 상호 간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는 국제문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 간 쌍무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려 하는 정치적 의지를 엿볼 수 있도록 한다. 평양 정상회담은 『친선, 선린 및 협조 조약』을 기반으로 향후 양국 간 관계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관련된 문제였다. 푸틴은 MD체제 구축의 명분이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에 개입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⁴⁵ 푸틴은 김정일로부터 미사일 개발 계획의 조건부

44. 공동선언문(Совместна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декларация)의 원문 및 번역문은 다음을 참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 8(2000), pp. 38-40; 이영형, 『조선/북한/한국과 구(舊)소련/러시아 간 주요 외교자료집, 1884-2001년 12월 자료』, pp. 411-413.

45. 이동형, “북·러 관계발전의 성격 고찰: 2000-2002년 김정일-푸틴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2002), pp. 147-178 참조.

포기⁴⁶ 의사를 이끌어 내면서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았고,⁴⁷ 북한은 자신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축된 입지를 보다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양국 간 관계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의 정상회담은 2000년 11월 28일~12월 6일 리인규 북한 외무성 부상이 극동지역을 순회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방정부와 경제교류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는 등 극동지역에서 북한의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⁴⁸

둘째,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 편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했고, 동년 8월 4일 양국 정상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를 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모스크바 선언)⁴⁹을 통해 발표했다. 모스크바 선언에서 나타난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동북아 현안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 폭 확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필요한 안보 환경 조성, 그리고 TKR-TKR 연결사

46- 김정일은 1998년의 탄도탄미사일 발사는 인공위성 발사 실험이었으며, 다른 국가가 인공위성 발사에 협력해 준다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July 20, 2000.

47- 푸틴은 중국(7월 17~19일)과 북한을 방문하여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반대하는 힘을 결집하였고, MD체제 구축에 명분을 제공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자신의 의지를 투사했다. 그리고 오키나와 G-8 정상회의(2000년 7월 21-23일)에서 자신의 외교력을 과시했다.

48- 이영형, “러시아의 對한반도 지정전략과 한국의 대응,” 『북한조사연구』, 제10권 2호 (2006), p. 149.

49- 공동선언문(Москов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의 원문 및 번역문은 다음을 참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 9(2001), pp. 8-9; 이영형, 『조선/북한/한국과 구(舊)소련/러시아 간 주요 외교자료집. 1884-2001년 12월 자료』, pp. 418-420.

업의 구체화를 통한 국익증대 방안에 맞추어져 있다. 모스크바 정상 회담에서 푸틴의 입장은 미국의 MD체제 구축 강행에 반대하는 국가(중국, 북한 등)들과 함께 반(反) MD연대를 강화하려 했고, 북한은 자신의 강성대국 건설 노력에 위협적인 미국의 MD체제 구축 움직임에 러시아 및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 이를 통해 해양세력(한·미·일)과의 협상력 강화를 모색하려 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안정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과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푸틴은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협력적 정치 상황을 이용해 남·북·러 3자 간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려 했다.

정상회담 이후인 2002년 3월 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모스크바 소재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동년 4월(4~12일)에는 북한의 조창덕 내각 부총리가 경제대표단을 인솔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조창덕 내각 부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블라디보스톡(연해주)·하바롭스크(하바롭스크주)·블라고베센스크시(아무르주)를 비롯한 극동의 주요 도시를 방문했다. 금번의 방문에서 북한 경제대표단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상대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셋째, 2001년 8월의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인 2002년 8월에 푸틴이 직접 북한과 인접한 블라디보스톡시를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났다. 2002년 8월 23일의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은 비공식 실무회담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공동선언이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이 기진 기자회견 내용이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

다.⁵⁰ 따라서 외무부 홈페이지에 기록된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양국 정상은 지난 2차례의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국제문제와 한반도 문제, 그리고 양국 간 정치 및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의 ABM(Anti-Ballistic Missile)조약 탈퇴⁵¹와 MD체제 구축 강행에 대한 입장과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푸틴은 남북관계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보다 확장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 전력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 개·보수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뿐만 아니라, 임업·어업·광업·농업·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⁵² 금번의 극동방문에서 상기의 합의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푸틴은 정상회담에서 철도연결 사업을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다. 한반도에서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사업이 실현 단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철도연결 사업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⁵³

50-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а перед журналистами по окончании беседы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обороны КНДР Ким Чен Ир. <<http://www.ln.mid.ru/>> (검색일: 2011.10.4).

51- 2001년 12월 13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ABM조약 탈퇴를 통보했고, 통고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2년 6월 13일 본 조약이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52- 정상회담 직전에 러시아의 RIA Novosti는 크렘린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벌목, 석유채굴, 광업, 수산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Правда*, August 22, 2002.

53- 푸틴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극동발전 대책회의>에서 철도연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중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중국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TKR/TSR 연결 사업을 성사시켜야 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이유”라고 했다. 『연합뉴스』, 2002년 8월 25일.

사실 러시아는 2001년 모스크바 정상회담 직후부터 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실사작업을 시작으로 북한 철도 현대화와 동해선 연결 사업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희망해 왔다. 철도연결 사업은 남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북·러 경제협력과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했다. 따라서 푸틴은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의 협력은 러시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협력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⁵⁴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비공식 정상회담 역시 양국의 필요에 의해 마련되었다.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 및 한반도에서의 입지를 지속 및 강화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극동지역의 안정과 개발정책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경제논리에 기초된다. 그리고 한국이 참여하는 3자 경제협력(TKR-TSR 연결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필요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2002년 들어 더욱 강경해진 미국의 대북 압박 및 9·11 테러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이 자신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의와 정치적 신뢰 증진이 필요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002년 7월 1일부터 임금인상 및 물가현실화, 공장 및 기업소 경영개선 등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여 제한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일은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들을 시찰하면서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성과를 확인하고,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었다.⁵⁵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업(벌목)·어업·건설·석유채굴·광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 문제가 중

⁵⁴ - *Правда*, August 23, 2002.

⁵⁵ - 이동형, “북·러 관계발전의 성격 고찰: 2000-2002년 김정일·푸틴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p. 168.

요하게 논의되었다.⁵⁶ 양국 정상은 만남의 장소를 블라디보스톡으로 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했고, 북한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송출하면서 임업·농업·어업·건설업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2003년 들어 북한의 임업성·경공업성·금속기계공업성·철도성 대표단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했다. 동년 <북-러(연해주) 간 경공업 협력의정서>(7월), <과학기술협조 의정서>(9월), <세관분야 협력 협정>(10월)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4~2005년에도 경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접촉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접촉에서 북한은 어업·농업·목재가공·조선·석유화학·에너지·운송·노동력 공급·과학기술 협력 등을,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 행정 주체 측에서는 북한의 노동력 공급에 관련된 경제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결국, 2000~2002년 추진된 3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는 안보 이슈에 대한 공조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북한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을 잇는 경제협력, 즉 극동지역의 임업·어업·농업·광산업 등에서의 북한 노동력을 매개로 한 협력, 북한지역의 통신·항만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그리고 발전소 보수 및 재건을 위한 협력 등을 요청해 왔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진출에 관련된 경제협력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북한의 체제안정과 이를 통한 극동지역 개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역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러시

⁵⁶- 2002년 8월에 북한·아무르주 간 농업 및 임업분야 협력 의정서가 조인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벌목 노동자들이 다수 진출해 왔다.

아 극동지역의 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안정과 개발을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개입해 왔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양국 간 정치 및 경제 협력의 중심지였으며,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에 유용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나. 메드베제프 시기(2008.5~2012.5)

메드베제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8월 24일 시베리아 동부의 바이칼 호수 인근에 있는 부랴티아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Улан-Удэ)시 외곽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금번의 정상회담은 2002년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 이후 9년 만이다. 정상회담 직후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에서 나눈 질의 및 응답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⁵⁷ 금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중요한 내용은 6자회담 재개, 경제협력 확대, 남·북·러 3자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표 III-2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

일시	장소	양자 협력	국제관계 협력
2011.8	부랴티아 공화국 (울란우데(Улан-Удэ)시 외곽)	• 남·북·러 3자 경제협력(가스관 건설 사업 등)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토대 마련	• 북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IAEA 사찰단의 영 변 핵시설 복귀 수용 의사

57. 메드베제프의 기자간담회(Встреча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обороны КНДР Ким Чен Иром) 내용은 다음을 참조.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от 24 августа 2011, p. 2.

첫째,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에 관련된 기존의 북한 입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북한의 거부로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까지 강행하면서 핵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2011년 7월 재개된 미·북고위급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⁵⁸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핵과 농축우라늄 시설들에 대한 IAEA 전문가들의 사찰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가시적 조치를 촉구해 왔다. 반면,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금번 회담에서 북·러 양국 정상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해 9·19 공동성명을 동시 행동의 원칙에 기초해 이행함으로써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기존 입장을 지지한 것이다.⁵⁹

정상 회담 이후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물론, 2011년 3월 러시아가 비핵화 조치 6개항⁶⁰을 제시할 당시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58. 김갑식,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의미,” 『이슈와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제 288호(2011.8.30), p. 1.

59. 여인곤,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와 평가,” (Online Series Co 11-20, 2011.8.25), p. 2.

60. 비핵화 6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핵무기 생산과 실험 중단,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시설에 대한 IAEA의 조사, 6자 회담에 UEP 안전 포함, 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이다.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금번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때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금번의 정상회담에서 핵물질 생산 및 실험 중단에 관련된 내용이 지적된 것은 한·미·일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중단 및 IAEA 사찰단 복귀와 함께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했었던 사안들이다.⁶¹ 금번의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의 일부가 포함된 것이다.

둘째, 경제협력 확대 및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경제협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극동지역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Бурей ская ГЭС)를 방문하면서 전력 확보 등에 관심을 보였다. 금번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대북 원유지원과 나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확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 문제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협력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러시아는 북·중관계의 긴밀화와 이에 따르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 현상을 극복할 목적에서, 북한의 입장은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안정적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와 중·러 간 경쟁구도를 자극하여 러시아로부터 보다 유용한 경제지원을 획득할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번의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이다.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스협력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었음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3자 협력의 현실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해했음을 밝혔다.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의 영토를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Pipeline Natural Gas: PNG) 수송관 건설을 낙관적으로 받아

⁶¹- 김갑식,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의미,” p. 2.

들임에 따라 가스관 건설을 위한 3자 특별위원회의 발족에 합의했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사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북한을 거쳐 사할린산(産)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파이프라인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여 가진 한-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당시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핵심은 북한을 통해 러시아산(産) 천연가스(PNG)를 2015년부터 30년 동안 한국으로 도입하는 내용이었다.⁶² 따라서 금번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유조선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식이 아니라 부설된 육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2011년 8월의 울란우데시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북한의 안정적 후계질서 구축을 통한 체제유지 정책이 맞물리면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9월로 예정된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아 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톡시의 발전»(«Развитие г.Владивостока как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러시아, 경제와 외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체제유지 및 후계질서 구축작업이 불안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 난관에 봉착될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가 정상회담을 가능하도록 했다.

62. 천연가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내소비량의 20%에 달하는 연간 750만 톤의 천연가스가 한국에 2015년부터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이영형, “이명박 정부의 러시아 외교정책 평가 및 한-러 관계 발전전략,” 『국제문제연구』, 제9권 4호(2009.12), pp. 96-138.

러시아는 2012년 9월로 예정된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자신의 극동지역을 아·태 경제권(특히 동북아 경제권)에 편입시키려 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과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돌출 행위가 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왔다. 북한의 돌출 행위가 <APEC 정상회담> 개최뿐만 아니라,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질서를 안정화시키고, <APEC 정상회담>에 만전을 기하려 했다. 북한 역시 안정적인 3대 세습을 위한 러시아의 지지와 에너지 등을 지원받으면서 2012년에 시작되는 강성대국 원년을 준비하려 했다. 그리고 중국에 편향되었던 정책을 재조정하여 중국과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정치, 경제, 외교적 실익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인식되었다.⁶³

울란우데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실무진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상회담 직후인 2011년 9월 28-30일 데니소프(А.И.Денисов)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다.⁶⁴ 지난 8월 24일 울란우데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발전시키는 실무차원의 방북이었다. 러시아 외무부의 보도문에 따르면, 9월 29일 데니소프 외무부 제1차관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북측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러시아에서 출발해 북한 영토를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과 유사한 노선의 송전선 건설, 그리고 러시아와 남북한 철도연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⁶³ 여인곤,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와 평가,” p. 2.

⁶⁴ 데니소프의 북한방문에 관련된 내용(О визите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А.И.Денисова в КНДР)은 다음을 참조.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от 30 сентября 2011 года, p. 3.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1년 8월의 올란우데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과 이에 파생된 변수들은 대부분 러시아 극동지역에 관계되고 있다. 북핵 6자회담 재개, <APEC 정상회담>과 극동지역 개발, «아·태지역 국제 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톡시의 발전», 북한에 대한 에너지 등 경제 협력 확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 확대, 남·북·러 가스관 건설 등이 그들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이라는 당면 과제가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라는 정치적 상황을 연출하는 데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되고 있었음을 짐작하도록 한다.

2.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유입과 북·러 간 경제협력

가. 중국 노동자 유입에 따르는 안보위협과 북한 노동자의 선호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역 개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금의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러시아가 노쇠 국가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가 2002년 초에 발표한 인구 전망에서, 러시아 인구가 2050년까지 30% 정도 줄어든 10만 1천 9백만 명이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2050년까지 7만 7천 2백만 명으로 반감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⁶⁵ 인구 감소 현상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극동지역은 광활한 면적과 풍부한

⁶⁵-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July 11, 2000.

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 개발에 필요한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극동지방의 인구는 2000년 1월 당시 717만 명에서, 2004년의 같은 시기에 666만 명으로 감소되었다. 극동지방의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1992년에서 2001년) 약 100만 명 감소되었다. 2010년 1월 현재의 인구는 644만 명이다.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출산율 저하와 외부로의 인구유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극동지방의 인구가 앞으로 20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은 극동지역내의 연해주·하바롭스크주·아무르주·유태인 자치주 등 중국과 인접된 지역이다.

● 표 III-3 러시아 극동지역 인구 현황

극동연방지구 주체 명	면적(천km ²)	인구(기준: 2010년 1월 1일)	
		인구수(천 명)	인구밀도(명/km ²)
전체	6,169.3	6,440.4	1.1
사하공화국	3,083.5	949.3	0.3
캄차트카 크라이 ⁶⁶	464.3	342.3	0.7
연해주	164.7	1,982.0	12.1
하바롭스크주	787.6	1,400.5	1.8
아무르주	361.9	860.7	2.4
마가단주	462.5	161.2	0.4
사할린주	87.1	510.8	6.0
유태인자치주	36.3	185.0	5.1
츄코트카자치주	721.5	48.6	0.1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2010: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10), p. 40; 44; 46.

⁶⁶- 2006년 7월 12일의 연방 법률 «캄차트카주와 코랴크자치구의 통합 결과에 따른 러시아연방의 새로운 주체 형성에 관하여»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캄차트카 크라이»가 형성되었다.

극동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더해, 지역 주민들의 노동 의식이 지역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 주민들의 다수가 육체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건축업·농업·임업·수산업 등의 영역에서 근로 활동을 피하려 한다. 이러한 사실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위해 외국 노동력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극동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불법 노동자가 합법적인 노동자 수를 최대 10배 이상 상회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유입되어 공식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극동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려 한다. 극동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다수가 연해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연해주를 주요 분석 대상지로 한다. 연해주 행정부의 언론 담당 비서에 따르면, 2004년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26,242명이다. 이는 전년도인 2003년의 그것보다 2.2% 증가된 수치이다. 분야별 노동자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III-4 2004년 분야별 연해주 외국인 노동자 수

분 야	노동자 수	전년 대비 증감(%)
건설 분야	10,739	+30.3
무역(식료품 관련)	7,033	-12.4
공업 분야	4,046	-16.3
농업 분야	3,086	-8.2

출처: <<http://www.regnum.ru/news/435900.html>>의 내용 재구성 (검색일: 2012.9.10).

연해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2004년 당시 연해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의 정도를 엿볼 수 있도록 한다. 2004년 당시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중국 노동자가 절대 다수를 점했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 수는 전년보다 8.3% 증가된 4,149명에 달했다.

● 표 III-5 2004년 국가별 연해주 외국인 노동자 수

국 가	노동자 수	전년 대비 증감(%)
중 국	17,675	-10.8
북 한	4,149	+8.3
베트남	1,229	1.9배 증가

출처: <<http://www.regnum.ru/news/435900.html>>의 내용 재구성 (검색일: 2012.9.10).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역에 중국인 노동자 진출이 절대적으로 많다. 중국의 동북부 접경지대에 펼쳐진 러시아 극동지역은 중국인에게 생활공간 탐구 및 자원을 위한 출구가 된다.⁶⁷ 2005년을 전후한 시기, 극동지역에 체류 중인 중국인 노동자 수는 합법적 중국인 25만± α 명과 불법 노동자 40~70만을 합쳐 약 80만± α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등 자신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유입되는 중국인 이주가 자신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으

⁶⁷- Олег Иващенко, “Россия 2010~2020 – без Сибири?... (краткий прогноз на ближай шие десятилетия),” <<http://politics.in.ua/index.php?go=News&in=view&id=5315>> (검색일: 2006.10.16).

로 생각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인 이주자들에 의해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치타주, 아무르주, 하바롭스크주, 연해주, 유태인자치주 등에서 중국인 이주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았다. 러시아의 동부지역이 중국의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바센코(Олег Иващенко)의 지적처럼, 2010~2020년 사이에 ‘시베리아 없는 러시아’가 만들어 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⁶⁸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고민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 진출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근면한 북한의 노동자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극동지역 노동 현장 및 지역시장 잠식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주면서,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중국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의 경제관계에서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주, 연해주, 사할린주, 아무르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기타 사하공화국, 부랴트 공화국, 옴스크주, 케메로프주, 마가단주, 노보시비르스크주 등이다. 이들 중에서 아무르주와 하바롭스크주에서는 산림, 건설, 농업 관련 노동자들이 주로 파견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북-러 간 협력 형태 및 대표지역은 야채재배(연해주, 아무르주), 주택건설(연해주,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 튜멘주, 노보시비르스크, 사할린, 케메로프주), 공단건

68. 중국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다음을 참조. 이영형, “중국의 러시아 극동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의식 구조 분석”, 『한국 시베리아 연구』, 제10집 06-2호(2006), pp. 29-62; 정한구, 『중국인 이민과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 동부지방의 중국화?』 (세종정책연구 2003-19).

설(하바롭스크주, 연해주,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 첼랴빈스크 주, 부랴트 공화국), 수산관련 산업(연해주 해안, 사할린주, 마가단주, 캄차트카 크라이) 등이다.⁶⁹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과 함께, 동일 지역을 아태 경제 협력의 중심지로 육성하려 한다. 따라서 러시아 중앙정부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하공화국, 아무르주, 자바이칼 크라이 및 유대인 자치구 등은 항구,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경제 수준이 낮으며 인구 밀도도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다. 해당 지역들은 산업 발전과 처너지 개간을 위해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 인력 외에, 북한 및 동남아시아 노동자 유입을 선호해 오고 있다. 북한이 이들 지역으로 자신의 농업 및 산림 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결국,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동북3성으로부터 대대적인 노동력 이주가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중국인 노동자의 과도한 진출을 차단하면서, 자신의 극동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특히 극동지역 지방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극동지역 유입을 선호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값싼 노동자들이 극동지역의 삼림 채벌 및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인 노동력 진출에 따르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의 극복과 극동지역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⁶⁹ <<http://www.vneshmarket.ru/>> (검색일: 2012.9.4).

나. 북한 노동자 유입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1995년 연해주 주지사 나즈드라첸코(Е.Наздратенко)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 극동지역의 아르썸(Артем)시(市)에 북한농업조합(корейско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е общество) 대표부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본 대표부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취업 알선과 연해주 건설 현장 등에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상기 대표부는 지난 10년 동안 1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등,⁷⁰ 북한 노동자의 극동진출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카라신(Г.Карасин) 외무부 차관이 1997년 1월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와 북한 양국 주민이 비자를 소지하고 상호 국경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⁷¹ 이러한 조치는 북한 노동자의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1997년 러시아 연방이민국은 북한 주민의 러시아 입국 및 출국, 그리고 러시아 영토에서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지방정부가 북한 노동자를 유입하는 러시아의 관련 회사, 그리고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내 활동 연장 및 출국 등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러시아로 유입된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지난날의 시베리아 벌목공에서, 건축업·농업·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가장 전망되는 협력 분야는 건설·농업·산림·광물·채취산업·어업·경공업·대외무역·교통·조선업 등이다. 연해주 지방 행정부는 러시

⁷⁰- Л.В.Забровская,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в эпоху глобализации: от затворничества к открытости: Монография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цент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2006); <<http://www.korusforum.org/PHP/STV.php?stid=57>> (검색일: 2007.12.4).

⁷¹- Ibid.

으로 유입되는 북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해주에 북한 노동자들의 교육을 담당할 연구소 개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러 간 경제협력 양태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노동력 제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북한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 사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수출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 간 정치관계가 소원했던 시기에도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 진출은 계속되었다.⁷² 2000년에 공식 등록된 북한의 노동자 수를 보면, 농업 부문에 10,000명, 건설부문에 2,000명 정도였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하바롭스크주와 아무르주 지역에 15,000여명이 별목공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2000년에 연해주의 건설과 임업분야 등에 5,000명의 북한 노동자 사용을 허가했다.

2000년 10월 양국 간 ‘경제무역 과학기술 협력 위원회’에서 극동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 사용에 대해 합의했다. 농업·임업·건설업·광업 등 4개 부문에 북한의 노동자 수출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 2000년 10월에는 북한 임업사절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하바롭스크주 및 아무르주에서의 목재 생산을 2003년부터 2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2001년 4월 4차 임업분과회의에서 하바롭스크주와 아무르주 지역으로 북한 별목 노동력 송출 문제를 협의했다.

북한은 러시아 극동의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제협력의 폭을 확장시켜 왔다. 연해주·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등

⁷² 1995년 4월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북한 농업위원회 간에 체결된 협력 협정에 기초해서, 북한의 농업 인력이 연해주 지역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종묘사업, 콩 및 야채 재배, 가축사육, 농촌주택 건설 및 보수, 농기계 수리를 담당했다. 임업분야 협력은 극동지역의 별목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1997년 9월 제1차 임업분과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에 수십 개에 달하는 북한의 기업이 진출해 왔다. 이들 기업이 담당하는 주요 업종은 건설·농업·요식업·자동차 정비업 등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케메로보주, 사하 공화국, 이르쿠츠크주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건설 노동자를 파견해 왔다. 또한, 탄광 공동개발 등을 통한 석탄/코크스 확보 노력을 전개해 왔다.⁷³ 그 밖에 임업·수산업 부문의 협력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02년 4월 북한대표단(단장: 조창덕 내각 부총리)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블라디보스톡(연해주), 하바롭스크(하바롭스크주), 블라고베셴스크(아무르주) 등 극동의 주요 도시를 방문했다. 북한 경제대표단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상대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연해주를 상대로 해서는 구소련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된 공장설비의 현대화 및 전력공급 문제를 비롯하여, 공동벌목 및 북한의 벌목인력 공급 확대·수산물 가공·농업협력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하바롭스크주를 상대로 해서는 목재 생산량 확대를 비롯하여, 건설 및 원유가공, 그리고 관광협력에 주력했다. 아무르주에서는 벌목량 확대 및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농업협력 문제를 비롯해서, 건설·무역·관광 등에 관련된 경험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⁷⁴

2002년 8월 23일 개최된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업(벌목)·어업·건설·석유채굴·광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 문제가 논의되었다. 2002년 8월 당시까지,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하바

73. 북한과 러시아는 1997년 이래 러시아 사하공화국내에 있는 코크스 탄광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1998년 4월에는 김책제철소에 대한 코크스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책공장현대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2000년 9월에 북한의 전기·석탄 공업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동탄광 개발의 실태 및 운영상 문제를 파악한 바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에 코크스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4. 이영형, “러시아의 對한반도 지정전략과 한국의 대응,” p. 150.

롭스크주와 아무르주에서 목재공급 관련 업무에, 그리고 연해주와 사할린주 등지에서는 건설 및 농업 현장에서 주로 활동했다. 양국 간 정상 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2001~2002년에 북한 측은 극동지역에 노동력을 수출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러시아 측 자료에 의하면, 연해주에서 북한 노동자의 비율은 2001년 기준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13.6%를 차지했다. 러시아 관리의 지적에 의하면, 2001년에 북한 노동자 2천여 명이 연해주에 투입되었고, 2002년에는 2,500명이 새롭게 투입되었다. 그리고 2003년 들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력 파견 문제가 제외된 적은 없었다.

2005년 8월에는 연해주 부지사인 빅토르 고르차코프(Виктор Горчаков)가 함경북도를 방문하여, 북한과 어업·농업·무역·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및 발전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고르차코프(В.Горчаков) 연해주 부지사에 의하면, 2005년 연해주 건설 현장에 3,32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해주 정부는 2006년의 연해주 건설 현장에 동원될 수 있는 북한 노동자의 한계를 5천명으로 증가 결정했다. 이러한 시기인 2005년 나호트카시(市)에 <북-러 무역경제 협력 펀드>가 결성되었다. 본 펀드의 주된 업무들 중에서 하나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본 펀드는 북한의 건설 회사인 <젠코(ZENKO)>와 함께 일하고 있다.⁷⁵

푸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장치들이 다

75.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진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2호(2007).

양하게 준비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북한 노동력 진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제협력 분야들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있었지만, 러시아 극동 현지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탈출 행위가 계속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이 미묘해졌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이탈 현상이 계속되면서, 미국과 UN 등에서 동일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2006년 6월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을 상대로 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당시 러시아 극동지역에 약 1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 중에서 매년 20~30명씩 한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⁷⁶

2007년 3월에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북·러 간 <경제통상협력위원회>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⁷⁷ 본 회의에서 러시아 잉여전력의 북한 수출 문제, 러시아산 원유의 북한 내 가공 문제, 철도연결사업 문제, 러시아의 북한 노동력 확대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⁷⁸ 그리고 양국은 2007년 8월 31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양국 주민의 상대방 영토에서 잠정(일시)적 노동 활동에 관한 협정»⁷⁹을 체결했다. 본 협정은 북한의 불법 노동이민자 수를 줄임과 동시에 러시아의 노동정책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체결되었다. 동 협정이 2009년 11월 18일 러시아 국가두마에서 승인되었고, 동년 11월 25일 연방소비에트

76- <<http://www.inopressa.ru/article/>> (검색일: 2012.9.4).

77- 북·러 간 <경제통상협력위원회> 회의는 2000년 10월 평양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난 6년 동안 중단되었다.

78- *RIA Novosti*, December 11, 2006.

79-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временно́й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раждан од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에서 통과되었다. 이와 함께,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2009년 12월 1일 «러시아와 북한 간 양국 주민의 상대방 영토에서 잠정(일시적)적 노동 활동에 관한 협정의 비준에 관하여»라는 연방 법률에 서명했다.⁸⁰

상기 협정이 체결될 당시의 러시아연방이민국(Федеральная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ФМС)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을 전후한 시기에 합법적으로 등록한 북한의 노동이민자 수가 3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당시의 불법 이민자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목적에서 상기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제2기 푸틴 집권기의 공식 통계자료에 기초된 연도별 북한 노동 이민자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III-6 푸틴 집권 2기, 연도별 북한 노동자 수

년도	노동 이민자 수(명)
2004	14,700 이상
2005	20,000 이상
2006	27,600 이상
2007	32,600 이상

출처: <<http://www.kadry.ru/news/detail.php?ID=32903>> (검색일: 2012.8.28)의 내용 정리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도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으로 파견되었다.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노동자 수는 30,000± α 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의 상당수는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등에 거주했다. 이와 함께, 파견된 노동자의 노동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에서 노동교육이 병행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 10월 현재 13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알타이 크라이에 있는 전문학교(«전문학교 No. 16»)에서 건축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이들은 알타이

⁸⁰ - <http://www.kremlin.ru/acts/6197>(검색일: 2012년 8월 28일)

크라이의 건축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130명이 이수한 전문 분야는 아래와 같다.

표 Ⅲ-7 알타이 크라이의 건축 전문학교에서 교육 이수(2010년 10월)

분야	인원 수(명)
미장공 3급(штукатур 3 разряда)	89
외장공-판(板) 3급(облицовщик-плиточник 3 разряда)	24
도장공 3급(маляр 3 разряда)	17

출처: <http://www.fms.gov.ru/press/news/news_detail.php?ID=38951> (검색일: 2012.8.28).

북한은 러시아의 극동지역뿐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시베리아 지역으로 자신의 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오고 있다. 러시아의 부랴티아 공화국(Republic of Buryatia)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으로 파견하려 한다. 부랴티아 공화국은 북한에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상기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시(市)는 지난 2011년 8월 메드베제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역이다. 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아무르 강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양자 간 경제협력에는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결국,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에서 북한의 노동력 변수가 제외된 적은 없었다. 양국은 정치관계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파견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건설 및 별목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동 영역 및 장소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현실이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당분간 더 건설 및 별목 관련 노동 영역에 잔류하도록

록 하고 있다. 푸틴 집권 3기에도 북한의 노동력 변수가 양자 간 경제관계를 이끌어 가는 주요 변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주요 도시별 북한 노동자 진출 현황

북한 노동자들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다양한 행정 단위(공화국, 주(州), 구(區) 등)로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의 연해주·하바롭스크주·아무르주 등지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 실태를 파악한다. 북한 노동자 실태 파악은 필자가 2006년 4월 1개월간 러시아 극동지역 현지를 조사하면서 얻은 자료에 더해,⁸¹⁾ 2011년을 전후한 시기에 러시아 극동지역 지방 행정부 및 주요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노동자 진출 현황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⁸¹⁾ 북한 노동자 현황은 약 1개월(2006년 4월)간의 극동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되었다. 넓은 지리적 공간에 대한 1개월간의 현지 조사가 불충분함을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러시아 현지의 지방정부 및 회사, 그리고 전문 학자로부터의 자료 요청과 인터뷰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루어졌다. 노동자 현황 조사는 2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현지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상기 연구 범위에 소속된 대상 지역 주(州)단위의 행정부 및 개별시(市) 행정부의 관련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극동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한국의 관련 기관(총영사관, 교육관, 코트라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러시아 극동대학교의 <한국학 센터>로부터 자료를 요청했다. 둘째, 필자가 현지에서 북한 노동력 수입에 관련된 회사 및 기관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했다. 이곳에서 분명히 밝혀 둘 것은 극동지역에 있는 북한 관련 기관(기업)이 1~2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다 많은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거쳐야만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겠지만, 북한 노동자들과 직접 관련된 몇몇 기업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수집된 자료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지역별 북한 노동자 진출 현황 및 상황은 필자가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현지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별 노동자 현황 및 보수 정도가 동일 지역의 전체 노동자 수 및 평균 보수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첫째,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한다. 연해주와 북한의 경제 협력에서 북한의 노동력 진출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협력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연해주의 경제적 이해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북한 노동자들은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연해주의 주요 도시로 유입되었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연해주에 유입되어 활동한 북한 노동자의 수 및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⁸²

표 III-8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수 및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율(%)

년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북한 노동자 수	1,774	1,181	1,421	3,956	4,144	3,119	2,134	2,373	1,469	2,013	1,780	1,441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율	20.1	15.2	25.5	30.8	30.6	27.6	20.6	23.5	12.5	13.6	12	9.3

연해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 수는 양국 간 정치관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양국관계가 소원했던 시기에도 북한 노동자의 연해주 유입이 계속되어 왔고, 이들 노동자들은 주로 건설과 농업분야에 고용되었다. 고르차코프(Виктор Горчаков) 연해주 부지사에 의하면, 2005년 연해주 건설 현장에 3,32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되었다. 연해주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동일 지역의 재건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따라서 연해주 정부는 2006년에 연해주 건설 현장에 동원될 수 있는 북한 노동자의 한계를 5,000명으로 증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⁸² Л.Забровская,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КНДР в Россию (середина 1940-х ~ 2003гг.),”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2003 г., p. 67.

연해주의 주도(州都)인 블라디보스톡시(市)에 다양한 건설 현장(아파트 및 상가 건설 또는 재건축, 집수리, 도로 보수, 각종 정거장 공사)이 있었고, 동일 시(市)에 체류하고 있는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2006년 4월 현재, 블라디보스톡 시에 약 2,500~3,000명(장기 체류자: 2,500~2,800명) 정도가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었다. 이들 노동자 대부분(약 97%)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고, 단지 3% 정도만이 어업 및 사업에 종사했다. 인터뷰 대상자인 이안톤(李安東) 사장의 건축 회사에도 30~40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노동 현장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북한의 관련 회사에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해 오고 있었다. 상납금액은 현지에서의 노동 보수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2006년 당시의 1인당 상납액인 \$500를 초과하는 노임을 확보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약 20% 정도에 불과했다.⁸³ 북한 노동자들은 상납금을 초과하는 노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다.⁸⁴

⁸³- 2004년 말 현재, 연해주(州) 현지 주민의 평균 임금은 약 \$250(약 7,180루블) 정도였다.

⁸⁴- 상납금 문제로 인해, 북한 노동자의 생활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집단적으로 숙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좁은 방 1칸에 5명씩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시간을 노동에 투자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다. 1주에 한번 전원 소집되며, 이때 정치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납금에 대한 결과 여부가 전달된다. '누구는 얼마를 상납하고, 누구는 상납하지 못하고 ...'라는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상납금을 독촉하는 소집에 다름없다.

● 표 III-9 블라디보스톡시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1인당 상납 금액

시 기	상납 금액
2000년 전후	\$200
2003년 전후	\$300
2006년	\$500

2006년 4월 당시, 블라디보스톡 전역에 상당수의 북한 불법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시(市)의 시몬카(Шимонька) 지역에 있는 기숙사에 다수의 불법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⁸⁵ 동일한 기숙사는 ‘신한촌’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 및 베트남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동일 기숙사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800~1,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노동자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들 역시 북한 정부에 상납금을 지불해야 됨은 물론이다.

2010년을 전후한 시기, 이웃하고 있는 아무르주와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블라디보스톡시(市)로 유입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이는 상납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많은 노동 현장이 있고, 보다 많은 노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현지에 파견된 북한의 관련 담당자들이 이러한

⁸⁵ 기숙사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러시아인에게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들의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다. 기숙사에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은 기숙사의 작은 방 한 곳에 4~6명씩 합숙하고 있으며, 1인당 한 달에 600루블(약 \$22~23)을 방값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 광고지 <달 프레스>에 광고를 내고, 아파트 개·보수 작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 현장에 동원되고 있었다. 이들 중 불법 노동자들은 러시아 현지 경찰의 검문을 피해, 아침 일찍 어디론가 노동을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다. 이들에게 인권의 문제는 생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이들은 마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동 상황을 차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수입금의 일부를 몰래 건네 주는 방식으로 노동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시(市)는 북한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중에서 한 곳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2010년을 전후한 시기의 현지 언론 보도를 평균 하면, 블라디보스톡시(市)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약 3천 명으로 추산되었다.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되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블라디보스톡시(市)를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로 및 항만 건설 및 개·보수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 공항 현대화 사업, <APEC 정상회담> 관련 건설사업, 루스키섬(Остров Русский) 개발사업,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석유화학단지 및 조선업 발전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 내용들이다. 이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수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2012년 전반부에 블라디보스톡 현지를 돌아보고 귀국한 동료들의 주장에 의하면,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었다. <APEC 정상회담> 장소인 루스키섬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의 진출에 따르면, 연해주 일대에 수천 명이 파견되고 있었다.

연해주의 기타 도시 상황은 어떠한가? 2006년 4월 현재, 연해주 제2의 도시인 나호트카시(市)에는 북한 총영사관 무역부 및 젠코(ZENKO)라는 북한 회사의 총본부가 위치해 있었다.⁸⁶ 나호트카시(市) 전역의

⁸⁶ <젠코(ZENKO)>는 2005년에 결성된 <북-러 무역경제 협력 펀드>와 함께 북한 노동자들을 초청하여 극동지역의 항구 보수 등 다양한 건설 현장으로 파견시키고 있었다. 북한 노동력을 수입하는 러시아인 회사 <북-러 무역경제협력 펀드>의 창립자 겸 사장인 두드닉(Дудник С.А.)과의 인터뷰에 기초해서 정리되었다.

여러 건설 현장에서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나호트카시(市)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약 700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특히 2005년 나호트카시(市)에 <북-러 무역경제 협력 펀드>가 결성되었다. 본 펀드의 주된 업무들 중에서 하나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사업이다. 본 펀드는 북한의 건설 회사인 젠코와 함께 일하고 있다. <북-러 무역경제 협력 펀드>에 의해서, 나호트카시(市) 건설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다.

●표 III-10 <북-러 무역경제협력 펀드>에 의해 나호트카시 건설 현장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

년 도	노동자 수(명)
2004년	150
2005년	250
2006년	350

우수리스크시(市)와 자루비노시(市)에도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 다수 노동자들이 우수리스크시의 농업 노동자로 활동해 왔지만, 현재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수리스크시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동일 지역으로 초청된 북한 노동자의 다수는 건설 및 방직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수리스크시의 한 방직 공장에 약 40여명에 달하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2005년 말까지 근무해 왔다. 그 이후의 정확한 노동자 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소규모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되곤 한다. 그리고

자루비노시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보통 2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루비노시에 거주하는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에 어업에 종사하고, 저녁에는 건설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2중적인 노동은 상납금을 채우고, 초과되는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삶의 투쟁에 다른 아니다.

둘째, 아무르주의 북한 노동자 현황이다. 블라고베센스크(Благовещенск)시(市)(인구: 약 22만 4천명)를 주도(州都)로 하고 있는 아무르주의 경제적 자원은 광물자원과 임업, 그리고 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석탄 및 임업자원이 풍부하며, 러시아의 주요 농산물(특히 콩) 생산지이다. 아무르주 영토의 60%가 산지(북부)이다. 2002년 8월에 북한·아무르주 간 농업 및 임업분야 협력 의정서가 조인되면서, 북한의 별목 노동자들이 상당수 진출해 왔다. 별목 노동자들의 수는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푸틴이 집권한 지난 2000~2008년 초 기간의 평균 노동자 수는 연 1,000명이 넘는다. 이들 별목 노동자들은 북한에서 파견된 보안기관 요원들에 의해 엄격히 감시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바롭스크주와 아무르주의 산림 현장에서 활동해 왔고, 북한은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별목된 산림의 일정량을 수령해 갔다.⁸⁷ 그러나 2006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중국이 대규모 자원을 투자해 동일 지역의 별목관련 노동 시장을 대부분 장악했다. 아무르주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노동자들의 유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별목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밀려 북한 노동자들의 별목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북한의 별목 노동자들이 상납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⁸⁷- Ирина Дробышева, “Корейский ориентир”,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ашгал*, No 1(41) январь 2004, p. 17.

다른 노동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연해주(특히 블라디보스톡시(市))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곳의 건설 팀에 합류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아무르주의 농업 및 임업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현황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무르주 현지에 파견된 외국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중국과 북한 인력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아무르주에 1,1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아무르주는 북한에게 20만ha의 농지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해 왔다. 아무르주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4개 지역의 처녀지를 북한에 임대할 계획을 구상해 왔다. 북한은 토지임대를 통해 다량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아무르주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벌목, 건축, 농업관련 노동자를 대거 파견해 온 지역이다.

아무르주에서 근무하던 북한 근로자 12명이 2009년 9월 한국에 집단 망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지원을 받아 망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근로자 4명이 추가로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아무르주 북한 노동자들의 이탈 문제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강화된 감시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고, 러시아연방 이민국 역시 북한 근로자의 집단 망명을 계기로 향후 이 같은 움직임이 재발될 가능성을 우려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 현황을 조사해 온 바사예프(С. Басаев)는 북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현지의 북한 노동자 단체를 “시베리아에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ГУЛАГ в Сибири)⁸⁸로 설명하면서, 그들이 마치 노예와 같은 생

⁸⁸ 쿨락(ГУЛАГ)은 소련 시절에 존재해 왔던 강제노동수용소를 일컫는다.

활을 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⁸⁹ 현지에서 탈출한 노동자의 주장에 의하면, 1994~1999년 동안 아무르주의 틴다(Тынды)시(市)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산림회사인 <틴다 산림>«Тындалес»)으로부터 약 700~8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탈출했다. 블라고베젠스크(Благовещенск)시(市)에 있는 인권보호센터의 자료에 기초해도, 탈출 노동자가 500명 이상이었다.⁹⁰

2010년을 전후한 시기, 아무르주에 있는 3개의 회사⁹¹에 1,300명의 북한 산림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호위대 요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회사에서 벌목된 목재의 약 9% 정도는 북한 벌목 노동자의 노동 대가로 북한으로 보내어진다.⁹² 이와 함께, 러시아 측은 산림 재조림(복구) 사업에 북한과의 협력을 제안해 왔다. 이외에도 목재가공관련 북·러 합작회사 설립 및 북한 노동자 직업 교육 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농업 관련 협력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2012년 2월 13일 북한 사절단이 아무르주를 방문해 농업 및 목재가공 분야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은 아무르주 국영회사 아그로(Agro)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자비즈콥 지역에 1천ha 규모의 농지에 콩, 감자, 야채를 경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북한노동자 40명이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무르주 로멘스코 지역에 1,500m²의 농장을 2012년까지 구축하여 2013년에 수백 마리의 젖소를 포함해 2천 마리의 가축을 사육할 계획을 갖고 있다.

⁸⁹-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Сергей Басае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ГУЛАГ в Сибири,” <<http://sarvarupa.livejournal.com/40234.html>> (검색일: 2012.8.28).

⁹⁰- <<http://druzbanarodov.ru/humanrights/271-2011-04-11-12-25-35.html>> (검색일: 2012.9.9).

⁹¹- ОАО «ЛПК «Тындалес», ОАО “Зейский ЛПК”, ЗАО “Туранлес” 등이다.

⁹²- <<http://druzbanarodov.ru/humanrights/271-2011-04-11-12-25-35.htm>>(검색일: 2012.9.9).

셋째, 하바롭스크주의 북한 노동자 현황이다. 동일 지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건설 현장에, 일부는 산림산업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 1995년에서 2003년까지 하바롭스크주에서 활동한 북한 노동자의 수 및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⁹³ 북·러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1997년 시점부터 하바롭스크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 수가 1,000명을 넘어 선 이후, 줄곧 수천 명씩 파견되고 있다.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하바롭스크로 유입된 외국 노동자의 평균 20%를 북한 노동자들이 차지해 왔다.

표 III-11 하바롭스크주의 북한 노동자 수와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율(%)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북한 노동자 수	319	296	1,050	1,065	2,020	1,363	1,383	1,735	1,600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율	6.9	5	27	29.6	46.1	19	20	20.9	19

하바롭스크시(市)에 북한의 <원동림업대표부>가 있다. 이곳에서 하바롭스크주에 파견되고 있는 북한의 임업 노동자들을 관리해 왔다. 하바롭스크 지역에 북한의 대규모 임업 노동자들이 진출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하바롭스크주의 삼림 면적은 6,203만ha에 달하며, 목재 채벌 가능량은 53억m³이다. 2001~2003년에 하바롭스크주에서 활동한 북한 노동자들 중에서 목재공급에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한 노동자(약 1천~2천명)들이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았다. 이들은 3~5천

⁹³ Л.Забровская,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КНДР в Россию (середина 1940-х ~ 2003гг.),” p. 69.

루블(\$100~170)을 공식적으로 수령했으며,⁹⁴ 이들 월급의 상당 부분이 북한 정부에 상납금 형태로 유입되었다.



■ 그림 III-1 ■ 원동림업대표부 전경(하바롭스크 소재)

2006년 5월 당시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북한 노동자가 1,000명을 넘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다.⁹⁵ 공식 등록된 북한 노동자 수는 1,040명이었지만, 등록 되지 않은 유동 인구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파악된 1,000여 명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하바롭스크시(市)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바롭스크시(市)에 있는 노동자들은 주로 건설 현장에, 그리고 일부는 산림산업 현장에 동원되고 있었다. 2006년 5월 당시 하바롭스크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⁹⁴ Ibid.

⁹⁵ 2006년 당시의 북한 노동자 파견 현황은 <VOSTOKENERGO>사(社)의 사장인 미나코프(Минаков В.Н.) 및 부사장 코로프코프(Коровко П.А.)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미나코프(Минаков В.Н.) 사장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북한에의 전력 공급 문제로 2차례 김정일과 면담을 가졌다.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은 파악되지 않았고, 이들의 상납액은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하바롭스크시(市)에 노동자를 공급하는 북한의 관련 회사는 보통 노동자 1인당 \$300씩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바롭스크시(市)의 북서부 652km 지점에 있는 베르흐네부레인스크(Верхнебуреинский) 지역의 체그도민(Чегдомыш)에 벌목장이 있다. 동일 지역에 상당수의 북한 벌목 노동자들이 진출해 왔다. 이들 노동자들이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 벌목장으로 파견된 노동자들의 이탈 문제가 북한을 괴롭히고 있다. 동일 벌목장에서 탈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고, 그러한 상황이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2010년을 전후한 시기 하바롭스크주 전역에 중국 노동자들이 상당수 진출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중국 노동자들이 하바롭스크시(市)를 중심으로 하는 여타 도시의 대규모 건설 현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하바롭스크주 및 아무르주의 벌목 사업이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었지만, 중국 노동자들이 동일의 지역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 노동자 수를 제한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북한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추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3.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을 위한 환경 분석

가. 한국-러시아 경제관계와 러시아 극동지역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한국의 교역 규모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992년 0.12%에서 2011년 1.96%로 상승했고, 1992년 \$1억 9천만에서 2011년 \$212억로 증가했다.⁹⁶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 실적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한국과 러시아의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경제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기초된 구체적인 성과가 미미한 관계로 인해 경제관계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의 대(對)러시아 경제관계는 특정 상품 및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 및 투자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관련 부품, IT 및 가전제품, 합성수지 등에 집중되었고, 진출 대상 지역 역시 러시아의 서부지역인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집중되었다.

●표 III-12 한국의 대(對)러시아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5,179	8,088	9,748	4,194	7,760	10,305
수입	4,573	6,977	8,340	5,789	9,899	10,852
무역수지	606	1,110	1,408	1,595	2,139	547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⁹⁶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러 경제교류 활성화 대책,”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23), p. 8.

한국의 대(對)러시아 투자는 2006년 연중 투자 금액이 \$1억을 초과한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투자 사업으로 대(對)러시아 투자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억 2,798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對)러시아 투자는 2011년 말 기준(누계)으로 434건, \$18억 8,895만로 한국 총 투자 누계액(51,449건, \$1,903억 8,561만)의 0.99%(금액 기준)를 차지하며 한국의 제19위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⁹⁷

●표 III-13 연도별 한국의 대(對)러시아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39,650	358,433	427,983	334,323	97,91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의 대(對)러시아 업종별 투자금액은 제조업이 총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도소매업, 광업, 건설업, 농림수산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중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제조업 전체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제조업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對)러시아 투자는 러시아의 유럽지역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중되고 있지만,⁹⁸ 러시아의 동부 지향성,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⁹⁷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 외국인투자 유입동향과 우리 기업의 투자 전략,”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9), p. 3.

⁹⁸ 모스크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전자, 유통, 식품, 무역, 건축, 통신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삼성전자, 오리온, 진로, 한국아쿠르트, KT, LG전자 등이다. 한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자동차 제조공장 설립을 위해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업체가 대부분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극동개발부 신설 등 현실 상황에 주목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내 기업체들의 다수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및 진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중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외교역량은 총 \$340억으로 전년대비 29.4% 증가하여 2010년(53% 증가)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248억으로 전년대비 33.3% 증가했고, 수입은 \$92억으로 전년대비 19.9% 증가하여 \$156억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가 전체 수출액의 67%를 차지했고, 수산물(8.3%), 목재 펄프(4.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1년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역 간 교역액은 \$93.6억(전체교역액의 27.6%)로 전년대비 50.2% 급증하여 한국이 극동지역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은 중국(24.9%), 일본(22.9%), 벨기에(6.7%), 미국(2.2%) 등이다.⁹⁹ 지난 수년간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일본, 영국, 룩셈부르크 등이 앞서 있으며, 한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러시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대한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동부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극동개발부 신설 및 극동지역 개발,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개최 등 푸틴 3기의 극동 개발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정책변화에 따라 지리적 인접성 및 에너지 매장량 등을 감안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프라(발전소,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등)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및 자원개발 플랜트를 연계하는 패키지 형태의 사업 추진에 적극성

⁹⁹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정부, 극동지역 개발 본격화,” 『수은해외경제』(2012.6), p. 55.

을 보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광구개발, LNG 프로젝트, 항만 건설 등의 사업을 비롯하여,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에 한국의 참여 및 금융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및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대우건설의 사할린 LNG플랜트 사업, 풍림산업의 사할린 가스 가압기지 공사 등에 참여 등이다. 에너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중화학 및 경공업(농업, 삼림, 수산업 등 포함)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남·북·러 3자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동력 변수가 동시에 요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말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대(對)러시아 교역 및 투자 증대를 위한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 의료, 금융 등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 개발 역시 필요해 보인다.

●표 III-14 한국의 대(對)러시아 경제관계와 3자 경제협력 변수

구분	한국의 대(對)러시아 경제관계						3자 협력 변수				
							북한 변수		러시아 변수		
경제 관계	· 한국의 대(對)러시아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년도	총교역액	북한의 교역 점유율(%)	비고 북한의 대러 무역 비중이 최대 5.7%로 중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수출	5,179	8,088	9,748	4,194	7,760	10,305	2005	232.3	5.7	
	수입	4,573	6,977	8,340	5,789	9,899	10,852	2006	210.6	4.8	
	무역수지	606	1,110	1,408	1,595	2,139	547	2007	159.6	3.4	
							2008	110.5	2.0		
							2009	62	1.2		
							2010	110	1.8		
	· 한국의 대(對)러시아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39,650	358,433	427,983	334,323	97,917						

주요 수출품	·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관련 부품, 합성수지 등	· 대러 수출품: 토석류, 소금, 철강 등 · 대러 수입품: 광물성 연료, 에너지, 목재, 목탄, 펄프 등	· 석탄, 원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석유제품 등
주요 대상지	· 러시아 서부지역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 러시아 동부지역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 극동지역 개발에 강한 의욕, 자본 및 노동력 부족
비고	· 경제정책과 남북협력 사업 고민 · 한국기업, 러시아 극동지역에의 투자 및 참여 희망	· 노동력 진출에 기 초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사업 선호	· 한국의 대(對) 러시아 투자 희망 · 에너지 변수에 기 초된 경제관계 희망(한반도 진출) · 남북러 3자 협력사업(철도, 에너지, 전력) 희망

나. 3자 협력 사업에 대한 3국의 입장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으로 논의된 에너지 협력 사업을 개괄한다. 2011년 8월 24일 시베리아 동부의 바이칼 호수 인근에 있는 부라티아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시 외곽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울란우데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스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3자 협력에 북한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해했음을 밝혔다. 북한을 거쳐 사할린산(産)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9월 28~30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29일 가진 한·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당시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러시아산(産)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PNG) 도입이 성사될 경우, 2015년부터 30년 동안 100억m³의 러시아산(産)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에 공급된다는 내용이었다.¹⁰⁰

2011년 올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러시아가 북한에 전달한 협력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일정은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한국의 가스공사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2012년 1월~4월 사이에 가스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가스관 노선 설계안을 마련하고, 2013년 9월부터 가스관 공사에 착수해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17년 1월부터 가스 공급을 시작하는 일정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스프롬(GAZPROM)이 2011년 9월 잠정 합의했다. 가스프롬의 부회장(зампред правления)인 알렉산드르 메드베제프¹⁰¹가 한국의 가스공사와 합의를 거쳐 2011년 9월 2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매년 기존의 100억m³에서 120억m³가 북한 영토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¹⁰²

남·북·러 3국을 연결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의 전체 길이가 약 1,200km이며, 이중 60%가 넘는 700km가 북한의 영토를 통과한다.¹⁰³ 북한을 통과하는 700km의 가스배관공사 비용이 \$25억으로 추산되었다.¹⁰⁴ 또 다른 보고서는 남·북·러를 연결하는 전체 파이프라인 길이를 1,122km로 본다. 그 노선이 블라디보스톡~북·러 국경~원산~평택/인천으로 되어 있으며, 파이프라인 길이는 러시아 구간이 150km, 북한 구간 740km, 남한 구간 232km이다. 보고서에 따라 북한 영토를 거치는 길이가 조금

¹⁰⁰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June 24, 2009.

¹⁰¹ 당시의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제프(Д.Медведев)였고, 가스프롬의 부회장은 알렉산드르 메드베제프(А.Медведев)이다.

¹⁰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September 28, 2011.

¹⁰³ *Ibid*.

¹⁰⁴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February 11, 2011.

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700km가 조금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자(한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 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동일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철도 연결 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러시아의 의도는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을 선호한다. 러시아가 남·북·러를 연결하는 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 방안을 북한 측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올란우데 정상회담 직전의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목격된다. 한반도의 8·15 독립과 관련해서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찾아진다. 축전에서 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 방안이 북한 측에 제시되었다. 2011년 8월 15일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나는 민족적 명절인 조선 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식민지 통치로부터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위업에 큰 기여를 한 소련 군인들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중략).... 우리는 가스화와 에너르기, 철도건설 분야에서 러시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사이의 3자 계획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모든 방향들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계획들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¹⁰⁵

105. 『로동신문』, 2011년 8월 15일.

북한의 입장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견된다. 8월 24일의 울란우데(Улан-Удэ) 정상회담을 정리하고 있는 노동신문은 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하면서,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철도를 연결시키는 문제 등 경제 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발전시킬 데 관련된 공동 인식이 이루어 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그룹들을 조직 운영하여 두 나라가 이 방향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¹⁰⁶ 고 기록하고 있다. 노동신문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에너지와 철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2011년 9월 28~30일 데니소프(А.И.Денисов)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다.¹⁰⁷ 8월 24일 울란우데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발전시키는 실무차원의 방북이었다. 러시아 외무부의 보도문에 따르면, 9월 29일 데니소프 외무부 제1차관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북측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러시아에서 출발해 북한 영토를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과 유사한 노선의 송전선 건설, 그리고 러시아와 남북한 철도연결 문제 등을 논의했다.¹⁰⁸

실무진 회동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라진-하산 철도구간 시범 열차운행 행사가 거행되었다. 2001년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 계속된 양국 간 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노력이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던 시기에 가스관 연결사업 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0월 13

106. 『노동신문』, 2011년 8월 25일.

107. 데니소프의 북한 방문에 관련된 내용(О визите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А.И.Денисова в КНДР)은 다음을 참조.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от 30 сентября 2011, p. 3.

108.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011년 10월 28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 등과 회동하여, 울란우데(Улан-Удэ)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합의 사항 등의 실천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신문』, 2011년 10월 30일.

일 라선시(市) 두만강역 지구의 조로(북·러) 친선각 앞에서 라진-하산 철도구간 시범 열차운행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주재덕 철도성 부상, 알레리 레쉴트니코프 러시아철도주식회사 상급 부총사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의 연설 내용은 라진-하산 철도구간에서의 화물 수송이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유럽사이의 경제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¹⁰⁹

2011년 10월 18일 양국 외교관계 설정 63돌에 즈음하여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연회가 개최되었다. 연회에는 알렉세이 보로답킨 러시아 외무성 부상과 정부관련 인사들이 참석했고,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관계자들도 초대되었다.¹¹⁰ 이러한 시기에 이타르-타스 통신사가 올란우데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일의 의지를 묻는 메시지가 통신사로 전달되었고, 그 답장이 보도 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가스관 부설에 대한 북한의 지지 입장이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양국 간 가스관 부설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 협조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¹¹¹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현실화는 남·북·러 3자 간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3자의 정치적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임하는 국가 정상들의 인식이 더 없이 중요하다. 2011년의 정상 회담에서 논의된 가스관 프로젝트는 한국과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적 합의가 북한에 강요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북한에 대한 강요는 러시아의 몫이 되었고, 그러한 강요를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¹⁰⁹. 『로동신문』, 2011년 10월 14일.

¹¹⁰. 『로동신문』, 2011년 10월 21일.

¹¹¹. 김정일 위원장이 이타르-타스 통신사에 보낸 서문 형식의 답변 전문은 다음을 참조 『로동신문』, 2011년 10월 23일.

러시아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게 된다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강요의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강요의 대상물을 한국으로 전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북한이 대등한 자격으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현실화하려면, 3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¹¹² 3국 정상 모임 장소는 블라디보스톡시에 있는 <APEC 정상회담> 장소가 바람직할 것이다.

다. 푸틴 3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3자 협력 환경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강화되어 왔으며, 영향력 역시 점진적인 회복 추세를 보여 왔다. 푸틴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회복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전략수립에 고민해 왔다.¹¹³ 러시아는 자신의 극동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초된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동일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차원이다. 러시아의 대(對)동북아 외교의 우선 과제들 중에서 하나는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과 세계시장에의 편입이다. 따라서 러시아 외무부는 유연한 대북 제재를 바탕으로 핵 폐기에 따른 전력 및 에너지 공급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자립이 필수요건이라

¹¹². 에너지 문제는 특정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3국 공히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관련 당사국의 대통령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¹¹³. С.Г.Лузянин, *Восточная политик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озвращение России на <Большой Восток>(2004-2008 гг.)* (Москва: Восток Запад, 2007).

고 강조해 왔다.¹¹⁴ 이러한 측면에서 극동의 잉여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08년 7월 발표된 러시아의 외교정책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서 볼 수 있듯이,¹¹⁵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목표는 핵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남북한과 건설적인 관계 유지; 서울과 평양의 대화 증진 노력 등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유지로 이어진다.¹¹⁶ 이것은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목표인 국경지역의 안정유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발전과 지역통합에의 참여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 노선이 2012년 5월에 시작된 푸틴 집권 3기에도 유지될 것이다.

지역안보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은 한반도 정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¹¹⁷ 따라서 러시아의 한반도 접근 전략은 자신의 동부 지역(특히 극동지역) 개발과 블라디보스톡시 발전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 하에서 추진될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몇몇 영역에서 구체화되었고, 또한 그러한 외교 노선이 제3기 푸틴 정부에도 계속될 것이다.

¹¹⁴-Georgy Toloraya, "The Six Party Talks: A Russian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Vol. 32, No. 4, 2008, pp. 45-69.

¹¹⁵-러시아 외교정책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 <<http://kremlin.ru/acts/785>> (검색일: 2012.8.29).

¹¹⁶-Принципи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России имеет общее оздоровление ситуации в Азии, где сохраняются источники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 конфликтов, увеличивается опаснос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Усилия будут сосредоточиваться на деятельном участии России в поисках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еше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поддержании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а поощрении диалога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Сеулом, на укреплен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¹¹⁷-Evgeny Bazhanov,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 (Moscow: Nauchnaya Kniga, 2002), p. 194.

첫째,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과정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정치 및 경제관계에서 남북한과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러시아는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통신 인프라 구축과 통신 서비스 사업, 그리고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과 연계된 항만터미널 건설 등 유망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외자 유치를 통해 극동지역 개발을 가속화 하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남·북·러 3국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TKR-TSR 연결 사업이 그들 중 하나이다. 2011년 10월 13일 라선시 두만강역 지구의 <조로 친선각> 앞에서 라진-하산 철도구간 시범 열차 운행 행사가 있었다.¹¹⁸ 라진과 하산 간 54km 철도연결 사업을 마무리 했고, 연결된 구간에 화물열차를 이용한 상업운행이 2012년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러 및 북·러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 연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의 임업·어업·농업·광산업 등에서 북한 노동력을 매개로 한 협력 사업을 모색해 오고 있다. 따라서 푸틴 집권 3기는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남북한과 3자 경제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푸틴 집권 3기는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동시에 한국과 긴밀한 정치관계를 유지

118. 행사장에는 주재덕 철도성 부상, 왈레리 레쉴트니코프 러시아철도주식회사 상급 부총사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의 연설 내용은 라진-하산 철도구간에서의 화물 수송이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유럽사이의 경제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로동신문』, 2011년 10월 14일.

하면서 극동지역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는 경제현대화와 극동지역 개발에 있어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¹¹⁹ 정치 및 경제관계, 그리고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해서 그러하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한국담당 소장인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박사 역시 러시아가 진정한 유라시아 강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¹²⁰ 이러한 지적은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이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한 핵문제로 인해 동북아 지역이 불안해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자국의 안전 보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보 불안요인을 극복하려 한다.¹²¹ 안보 환경이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에 유익한 조건을 창출해 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치외교 협상을 중시하고, 기존의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려 하며, 이러한 협력 틀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다자협의기구로 발전되길 원하고 있다.

집권 3기 푸틴의 대북 정책은 메드베제프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을 유지할 것이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2월 27일 푸틴 총리는 <모스크바 소식>(Moskovskie Novosti)에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라는 글을

¹¹⁹ 『연합뉴스』, 2012년 3월 5일.

¹²⁰ Georgy Toloraya, ‘The Korean Peninsula: Gateway to a Greater Role for Russia in Asia,’ *Global Asia*, Vol. 7, No. 2(Summer 2012).

¹²¹ 최태강,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어제, 오늘, 내일,” 『신아세아』, 16권 2호(2009년, 여름) 참조.

통해 러시아의 외교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기고문에서 푸틴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 왔으며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푸틴은 러시아와 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이고, 이러한 이웃관계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이 갖는 의미는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할 것이며, 선린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인도할 것이다.¹²²

제3기 푸틴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북한 자체에 대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극동지역과 연결된 국경지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그러하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동북아 국경지대(특히 북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극동 개발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김정은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선호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3월 6일 대선에서 승리한 푸틴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양국의 우호관계발전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2012년 8월 15일 푸틴 대통령에게 전문을 발송하여,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희망했다.¹²³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우호 동맹국인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희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제3기 푸틴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다음의 내용에 무게를 두면서 추진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남북한

¹²²- *RIA Novosti*, February 27, 2012.

¹²³- <<http://www.amic.ru/news/189474/>> (검색일: 2012.8.29).

과 등거리 외교를 유지한다. 에너지 사업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에너지 협력과 철도연결 문제 등을 비롯해, 남·북·러 3국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북한과의 정치 및 경제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자 한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정치적/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상기와 같은 기본 노선을 통해,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과 안정적 성장에 필요한 안보 및 투자 환경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다.



IV. 한국의 정책적 고려

1. 국가 주도의 3자 간 경험 틀 구축

러시아의 에너지정책이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했다.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은 미개발 광구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전략2030»과 ESPO 송유관 건설 사업은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동부지역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도록 자극하고 있다. 러시아는 단순한 원유 수출을 지양하고, 송유관 종착지인 연해주 남부지역에 대규모 원유터미널과 정유공장, 그리고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려 한다.¹²⁴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APEC-2012> 관련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지역의 역동성을 한 단계 격상시켜주고 있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장기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동부시베리아와 자바이칼 지역 개발프로그램, TSR-TKR 연결 사업¹²⁵, 전력망 연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캄차트카 해상 광구 탐사

¹²⁴ 이곳에서 가공 및 생산된 석유류 제품을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할린에서 하바롭스크로 연결되는 502km 길이의 이스턴 라인(Eastern Line) 가스 파이프가 완성되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만성적인 가스 및 전력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중국, 한국 등 태평양 연안국에 가스와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¹²⁵ 철도연결 사업은 북-러 간 수차례 협의되었다. 2007년 11월 22일자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러 양국은 54km 거리인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하산(Hassan)역을 연결하고 라진항을 개건하는 사업에 합의했다. 북한의 라진항 운영에 필요한 전력제공 방안과 하산과 라진 간 철도연결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의 인테르 라오 예에에스(INTER RAO UES) 회사 대표단이 2008년 1월 26일 평양에 도착했다. 『조선중앙통신』, 2008년 1월 26일. 그리고 알렉세이 메르시야노프 부총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식회사 <러시아 철도> 대표단이 2008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양국의 철도기관은 하산~라진사이의 철도와 라진항 개건에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철도기관은 라진항에 부두를 건설하고, 하산~라진사이의 철도를 개건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한 국제화물 중계수송망 건설을 담당하게 될 합영기업을 창설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사업, 2012년 <APEC 정상회담> 이후의 지역 내 인프라 및 주변시설 건설 프로젝트 등이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북한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본과 기술에만 의존되는 사업이 아니라, 노동력을 가미시켜 3자 간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남·북·러 3자 간 공통 관심사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건설, 어업, 산림, 그리고 운송관련 영역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해 온 ‘녹색 실크로드’ 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하던 2008년 4월 15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해외식량기지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해주와 같은 지역의 땅을 30~50년 장기 임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북한의 노동력도 이용할 수 있고 운반거리가 짧기 때문에 (물자를) 북한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¹²⁶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구상에 동의하면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남·북·러 3자 간 농업협력 협정(가칭)>을 체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톡의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2012년 9월 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청와대의 자료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 과학기술협력,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등 3각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¹²⁷ 이명박 대통

합의했다. 『로동신문』, 2008년 3월 21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8년 10월 4일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 개건 착공식이 조로 친선각 앞에서 진행되었다. 『로동신문』, 2008년 10월 5일. 착공식에 참석한 러시아철도공사 총사장 야쿠닌(V.I.Yakunin)은 2013년에 가서 이 철도구간으로 연간 10만개의 컨테이너가 수송될 것이라고 했다.

¹²⁶ <<http://www.president.go.kr/k>> (검색일: 2008.6.2).

¹²⁷ 양 정상은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우주 및 방산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상호 인적교류 증대를 위하여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다.

령과 푸틴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남·북·러 3자 협력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실무 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될 협력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러 가스관, 철도, 그리고 전력연결 사업과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한·러 간 협력 강화에도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¹²⁸ 양국 대통령은 극동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수산물 쿼터 확대와 수산분야 투자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 회담>에서 에너지 및 식량안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 가능성을 더 한층 높여준다.

푸틴의 제3기 정부는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의 동부지역이 다양한 외부 노동자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극동지역에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진출해 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현지인들의 지적처럼,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극동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보안 요원들의 감시를 피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들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 신청하는 경우도 생겨나면서 남·북·러 3국 간 또는 양자 관계가 미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발견된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지속성을 지닌 협력정책으로 수정되고, 북한을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정책적 사고와 함께 시작된다.

128.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 (검색일: 2012.9.9).

북한을 경제협력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3자 간 공동 관심사에 기초된 3자 간 외교 협정을 체결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소련 해체 이후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가 한반도 2개의 정부와 체결한 각종 협력 협정을 중에서 경제관련 협력 협정을 분석하면서, 상호간 필요한 영역에서 3자 간 협력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3자 간 협력 협정은 서울과 평양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소통의 교통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러 3자 간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은 3자가 공히 원하는 영역을 모색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경제관련 협력 협정은 농업, 어업, 임업 등을 포함하는 경공업에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협력 대상 공간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이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에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¹²⁹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다양한 외교 문건들 중에서 경제관련 협력 협정에는 에너지, 철도, 삼림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3자 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3자 간 협력 협정 체결은 한민족(한국 및 북한 주민, 현지 고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적 준거 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¹²⁹ 이영형, “이명박 정부의 러시아 외교정책 평가 및 한·러 관계 발전 전략,” p. 123 참조.

표 IV-1 남·북·러 3자 협력사업과 한국 정부의 역할

협력 영역	세부 내용	한국 정부의 역할	비고
농수산 및 삼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임업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3자 간 협력 협정 체결 사업 영역 선택 및 협력적 공간 확보 북한을 사업 주도국으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자 간 공동논의 북한의 노동력 활용 북한 개혁·개방 유도
종합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건설 각종 인프라(도로 및 항만 등) 산업시설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3자 간 협력 협정 체결 한국이 주도국 역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자 간 공동 논의 북한의 노동력 활용 북한 개혁·개방 유도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 원유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3자 간 협력 협정 체결 미국과 휴전선 통과 문제 해결 러시아를 사업 주도국으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관통 3자 간 공동 논의 북한 에너지난 해결 북한 개혁·개방 유도
철도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TSR/TKR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3자 간 협력 협정 체결 미국과 휴전선 통과 문제 해결 한국과 러시아가 사업 주도국 역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관통 3자 간 공동 논의 북한 철도 및 철로 개·보수 북한 개혁·개방 유도

한국 정부가 별도로 담당해야 될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남·북·러 3자 간 협력 사업들 중에서 한반도 영토를 거치는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이 그것이다. 에너지 협력사업과 철도 및 송전선 연결 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협력 사업은 휴전선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상기 3가지 협력 사업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2. 민간 주도에 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2008년 9월 28~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가진 정상 회담에서 남·북·러를 잇는 TKR-TSR 연결, 서캄차카(Kamchatka) 해상광구 공동개발,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등 에너지 협력, 농수산 및 임업협력 등에 합의했다. 그리고 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양국 간 인적교류가 증대되고 한국 기업인들의 러시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해온 철(鐵)의 실크로드¹³⁰, 에너지 실크로드¹³¹, 녹색 실크로드¹³² 등 3대 신(新) 실크로드 비전이 정책화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북한과 함께 한다면, 북한의 개혁 및 개방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있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향으로 그동안의 일방적 지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쌍방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상호 결합하게 되면 남과 북 모두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자신의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남·북·러 3자 간 협력 사업이

¹³⁰- TKR과 TSR을 연결하여 남한-북한-러시아를 잇는 철로의 대동맥 건설을 의미한다.

¹³¹-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건설 경험을 결합하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의미한다.

¹³²- 연해주의 광활한 농림지에 한국의 영농기술과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접목하여 태평양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녹색벨트 구축을 의미한다.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한반도 2개 정부에 자신의 극동 지역으로 진출해 줄 것을 희망해 왔다. 한국의 자본 투자는 소극적이었지만, 북한의 노동력 진출은 적극성을 보였다. 이러한 환경에 기초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이 개혁 및 개방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3대 세습에 따르는 정치권력 불안과 정통성 확보의 어려움, 경제적 낙후성에 따르는 국민의 불만 등이 개혁·개방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보다 덜 민주적이고, 개발되어지지 않은 경제 지대를 찾고 있다. 자신과 인접된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극동지역, 그리고 몽골이 대표적인 지역들로 생각되어질 것이다. 이들 지역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파견하면서 경제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표 IV-2 민간 주도에 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전략

구분	대상	효과	비고
대상지	• 러시아 극동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르는 불안 요인 최소화 • 북한 노동자 현지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개방 불안 요인(3대 세습에 따르는 정치권력 불안, 경제적 낙후성에 따르는 국민의 불만 등) 최소화
대상자	• 현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 • 보다 많은 노동자 파견 유도 • 북한의 경제회복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쉽게 접촉 가능
주체 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부설 연구소 • NGO • 민간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및 러시아의 안보 우려 최소화 • 개혁·개방에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중심일 경우, 북한의 안보 불안 증대(협력 사업에 소극적)

북한은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완만한 개혁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되면,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주시하면서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상 공간들 중에서 한 곳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을 선택하고, 현지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주체세력은 국내의 대학 부설 연구기관(혹은 NGO) 또는 민간 기업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그러한 현상은 피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북한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유인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는 이미 만들어진 협력 사업의 틀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협력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구축 작업에 역점을 두면서, 국내의 관련 기업체를 선정 및 지원하여 북한 노동자와 협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간접적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종합건설, 농업, 산림, 수산 등에 관련된 국내 기업체가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3자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동일 지역으로 북한의 노동력이 파견되고 있음을 이미 보았다. 북한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종합건설 영역을 비롯하여, 임업·어업·농업·광산업 등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매개로 한 협력을 제안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¹³³ 따라서 북한 노동자 다수가 파견된 지역인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그리고 아무르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3자 간 협력

133.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pp. 51-75 참조.

사업을 개발하여, 국내의 민간 기업체가 진출하면서 서울과 평양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할은 협력의 틀을 구축해 주는 것이고, 개별 민간 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은 동북아의 역동성과 자원협력 그리고 북한의 개방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는 대북정책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및 극동지역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3자 간 윈-윈(Win-Win)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야 한다. 고려인과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¹³⁴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적자원과 일본의 물적 자원(경제력)이 극동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의해 봉쇄당하는 형국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3. 북한 노동자에게 자본주의 체험 기회 보장

한국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서 이탈하는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수용해 오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2009년에 2,927명에 달했다. 2010년에는 다소 감소되기는 했지만 2010년 12월까지 총 20,36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입국했고, 2012년 7월의 잠정 집계로 총 24,010명의 북한이탈주

¹³⁴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표적인 고려인 거주지는 연해주와 사할린, 하바롭스크 등이다.

민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경유해서 입국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 표 IV-3 북한이탈주민 현황

기준: 2012년 7월 입국자(명)

구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7 (잠정)	합계
남	...	424	514	571	606	662	589	798	259	7,427
여	...	958	1,512	1,980	2,195	2,252	1,812	1,908	656	16,583
합계	...	1,382	2,026	2,551	2,801	2,914	2,401	2,706	915	24,010
여성비율 (%)	...	69	75	78	78	77	75	70	71	69

자료: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166>> (검색일: 2012.9.20.)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되면서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고,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기도 한다. 정부는 서울 북부, 경기 서부, 대구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¹³⁵ 탈북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민간 복지기관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하나 센터>를 설립해 놓고 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수용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¹³⁵. <하나 센터>의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다.

국내로 유입된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학습했고, 그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경쟁이 아니라 공동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체제에 길들여져 있다. 이들은 수동적으로 일을 할 뿐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국 정부에서 세제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고용을 늘려가는 경향이 보이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환경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작업능력 부족과 직장문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단기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필자는 사회주의 체제의 소련과 그 이후의 러시아에서 수학하면서, 그리고 수차례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면서 현지의 북한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북한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얻은 결과는 이들이 단기간에 한국식 자본주의 문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식 경쟁사회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는 듯하다. 국내 입국과 동시에 소정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들이 직접 한국식 경쟁사회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의 적응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작업은 한국식 자본주의 문화를 강압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문화가 혼합되는 제3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진적으로 한국식 경쟁 문화에 익숙하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제3국에서만 가능하다. 탈북 노동자들을 한국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제3국(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시장 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주의 이식은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체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국 정부는 남·북·러 3자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이러한 환경적 토대 위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체가 현지로 진출하면서 3자 협력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회사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한국식 자본주의 문화를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북한 노동자들의 자본주의 체험은 장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조급하게 추진되는 북한이탈주민 수용 정책이 낳는 문제점(남북관계 악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부적응 및 재탈출 현상 등)을 극복하면서, 남과 북의 묵시적 협력 하에서 추진되는 극동지역에서의 자본주의 이식 사업이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더 긍정적일 것이다. 러시아 극동 현지에서 한국식 자본주의를 학습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남북한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주민에 대한 자본주의 교육은 통일 사업의 중요한 자산이자, 통일 이후에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찾아가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 통일이 가져올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한민족 공동체> 건설과 통일 환경 조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특정 시기에 구속되지 않는다. 한반도를 상대로 지정전략을 구사하는 게임 참가자가 바뀌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경쟁 속에서 청일전쟁(1894.6~1895.4)과 러일전쟁(1904.2~1905.9)이 발발했고, 미국과 소련의 경쟁 속에서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그리고 현재에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권 확장 경쟁이 한반도와 그 주변부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볼 때, 한반도 문제에 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는 국가는 러시아이다.¹³⁶ 그리고 극동지역 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러시아는 중국의 노동력 진출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극동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정책과 <한민족 공동체> 건설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동일 환경 조성 사업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바라 보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고려인, 북한 기업체 및 파견 노동자, 한국 기업체(직원) 및 유학생 등 다양한 목적의 체류자들이 섞여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한국과 북한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개설된 기존의 각종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에 <한국 교육원>이 있다. 연해주 전체에 46개(교육원 포함)의

¹³⁶ 한반도 주변 4강들 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문제이다. 북한 문제의 해결과정에는 미국의 국제전략(특히 대(對)중국 봉쇄전략)과 중국의 대응전략이 맞물려 돌아간다. 이들의 입장은 자신의 지정전략에 기초되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못하다. 일본은 지난날 한반도에 미친 부정적인 정치행위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한글학교가 있으며, 이곳에서 수학하는 교육생은 4~5천 명에 이른다. 그리고 연해주의 우수리스크시에 있는 ‘29번 김나지움’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어 있다. 상기 지역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다수 파견되고 있다.

사할린을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인구 통계 조사를 실시한 2002년 당시 사할린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가 54만 5천 명이며, 이들 인구 중에서 5.4%가 고려인이었다.¹³⁷ 사할린주 인구수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2010년 현재 약 3만 명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고려인들은 각종 조직체를 결성하여 한민족 문화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사할린주의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사할린주 한인회가 있으며, 동일 한인회 건물 내에 노인회가 있다. 사할린주 한인회는 <한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동 한인회는 한국어로 된 <새고려 신문>을 발간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고려인 결속과 민족문화 복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려인 1세를 중심으로 한국으로의 영주 귀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9년 9월 사할린 거주 동포 40명의 첫 모국 방문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사할린 고려인 영주귀국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 1월 한국 정부는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관련 사업을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했고, 199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정부는 사할린 고려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한·일 적십자가 주축이 되어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일 양국 간 사할린동포 영주귀

¹³⁷-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 652.

국 확대사업에 관련된 협의에 따라 2007년부터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본부의 관련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거쳐 얻은 내용에 기초되면, 1992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사할린 고려인의 영주 귀국자 수는 2011년에 귀국한 102명을 포함하여 2012년 10월 현재 4,008명에 이른다.¹³⁸ 영주 귀국한 이들 고려인들은 국내의 다양한 지역(인천, 김포, 음성, 오산, 파주, 안산, 아산, 화성, 원주, 천안, 제천, 청원, 유성, 고령, 양산, 김해, 부산, ...)에 분산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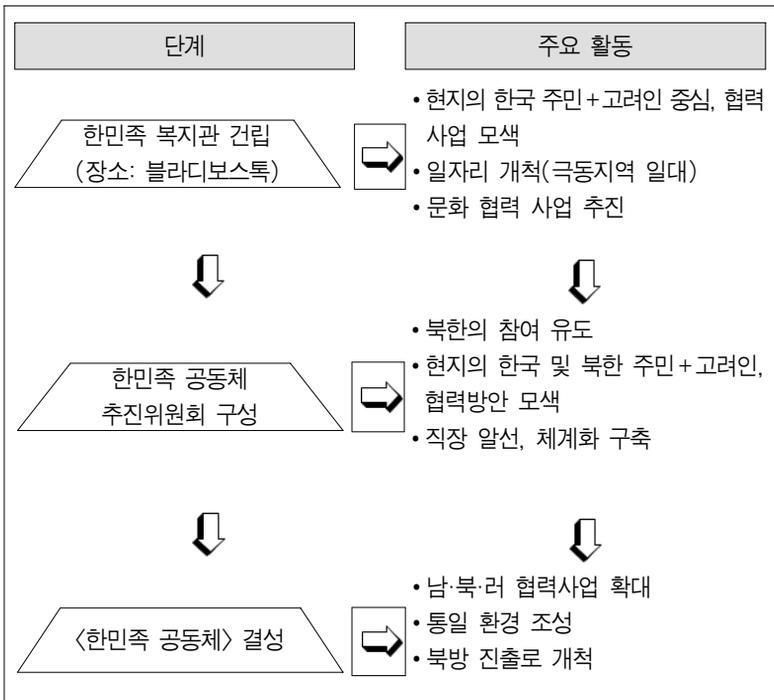
2012년 현재에도 사할린주를 비롯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 수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가칭)> 결성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된다. 현지 고려인, 현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인 등을 중심으로 <한민족 공동체>를 결성해서 통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할린 등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영주 귀국한 고려인들 중 일부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현지 고려인들을 영주귀국 시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 역시 중요해 보인다. <한민족 공동체> 건설 차원에서 극동 지역의 고려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지의 북한 노동자들을 동일 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설적 사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의 현실화 작업은 극동지역 전문 연구소나 NGO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면

¹³⁸ 필자가 2012년 10월 4일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본부의 관련 담당자와 전화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의 영주귀국 사업은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2년 10월 현재까지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고려인은 4008명이다. 그리고 사할린 한인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1세는 1,500명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시킬 목적에서 그러하다.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 및 NGO 단체가 극동지역의 고려인들과 함께 한국문화 확산 및 동질성 회복 운동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동일 운동에 현지에 있는 북한 기관 및 파견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에서의 노동 현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이 북한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 표 IV-4 한민족 공동체 건설과 통일 환경 조성 체계도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지로 하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 사업을 북한에 공식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간단체(교육단체)가 북한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는 북한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보다 쉽게 유인할 수 있으며,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통일 한반도의 북방 진출에도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



V. 끝맺는 말

러시아는 2000~2002년, 그리고 2011년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에 유익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면서 극동지역 개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안보문제와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조성 작업이 이루어졌고,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는 전력부문 합작기업 및 TKR-TSR 연결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논의되었고,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업·어업·농업·건설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2011년의 울란우데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러 3자 경제협력(가스관 건설 등)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상기 수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노동자 관련 변수가 제외된 적은 없었다.

북·러 간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보여 준 러시아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북한 노동력 변수를 통한 경제협력과 3자 경제협력을 통한 극동지역 개발에 있었다. 2011년의 울란우데 정상회담 직후인 2011년 9월 28~30일 데니소프(А.И.Денисов) 제1차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논의한 내용은 가스관 건설과 유사한 노선의 송전선 건설, 그리고 철도연결 문제 등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러시아는 남·북·러를 연결하는 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 방안을 북한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연결 사업은 이에 필요한 전력이 요구되고, 가스관 건설 역시 전력을 필요로 한다. 북한 스스로가 전력을 조달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러시아가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3자 협력의 현실화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노동자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국가 주도형은 에너지 협력 사업, 그리고

TKR-TSR 연결 사업 등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여 아·태지역으로 공급하려는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은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판이 된다. 그러나 북한의 돌출 행위가 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질서를 안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극동지역 개발정책, 에너지 정책의 동부지향성, 그리고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등이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시 인근으로 결집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3자 협력 사업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 주도형은 국내 중소기업체의 현지 진출에 기초되어, 농업과 어업 그리고 산림분야에서 찾는 것이 현실성이 높아 보인다. 하바롭스크주와 아무르주 등에 풍부한 농지와 산림 자원이 있고, 동일 지역에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 등을 위해 북한 인력 수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인력 송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정책적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등 북한 인력의 러시아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 현지로 한국의 관련 기업체가 진출하여 현지에서 3자 경제협력이 가능한 사업 영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동일의 생산 단위체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국내의 민간 기업체가 현지로 진출하여 3자 협력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 및 한민족 공동체 건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서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노동자들을 바라볼 것을 주문하려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칼잡을 자야 될 정도의 좁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북한에 상납해야 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현지인들의 지적처럼, 북한 노동자들은 소련 시절의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진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도 3자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규모 노동력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북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중국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연해주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전체에 중국 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몰아가게 된다.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 하나는 중국의 힘에 밀려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북한·러시아 등 3자 경제협력의 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북한 노동력 진출 등을 고려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될 4가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 첫째, 국가 주도로 3자 경협을 위한 틀을 구축하고 것이고, 둘째로는 민간 주도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시스템에 물들어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형 노동 가치를 인식시켜 남북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3자 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한의 노동 강도와 직장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통한 통일 환경 조성이다. 현지 고려인, 현지의 북한 노동자, 한국 주민들이 함께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건설하여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끝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지정전략을 생각해야만 한다. 중국의 노동력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잠식해 들어가는 현상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반도의 북부지역인 러시아 극동지역이 중국의 노동자들에 의해 잠식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한국을 포위하는 그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될 것이다. 현지에 있는 고려인 및 북한 노동자들과 함께, 한반도 북부지역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열린 공간을 통해 대륙으로 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영형. 『조선/북한/한국과 구(舊)소련/러시아 간 주요 외교자료집. 1884-2001년 12월 자료』. 서울: 엠에드, 2002.

_____. 『지정학』. 서울: 엠에드, 2006.

정한구. 『중국인 이민과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 동부지방의 중국화?』. 세종연구소, 2003.

Evgeny Bazhanov.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 Moscow: Nauchnaya Kniga, 2002.

В.Г.Глушкова. Ю.А.Симагин. *Федеральные округа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Москва: КНОРУС, 2009.

Л.В.Забровская.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в эпоху глобализации: от затворничества к открытости. Монография*.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цент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2006.

С.Г.Лузянин. *Восточная политик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озвращение России на <Большой Восток> (2004-2008 гг.)*. Москва: Восток Запад, 2007.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2010: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10.

2. 논문

김갑식.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의미.” 『이슈와 쟁점』. 제288호(국회입법조사처), 2011.

박기원. “러시아, 2013 극동러시아 개발프로그램 채택- 2013년까지 168억 달러 정부예산 투입 -.”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의 2007년 8월 3일의 보고서.

- 서보혁. “강화되는 북·중·러 협력관계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주최 <심화되는 북·중·러 삼국의 협력관계: 북방삼각의 복원 움직임인가?> 전문가 포럼(2011.10.11) 발표 논문.
- 여인근.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와 평가.” *Online Series*, Co 11-20, 2011.
- 이동형. “북·러 관계발전의 성격 고찰: 2000-2002년 김정일·푸틴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 이성규. “ESPO원유공급과 동북아시아 석유시장 형성 전망.” 한국슬라브학회 2010년 추계 정기학술회의, 2010.9.30.
- _____. “ESPO 원유 등장으로 아시아 원유공동시장 가시화.” *Russia: CIS Focus*. 제68호, 2010.
- 이영형. “러시아의 對한반도 지정전략과 한국의 대응.” 『북한조사연구』. 제10권 2호, 2006.
- _____. “중국의 러시아 극동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의식 구조 분석.”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0집 06-2호, 2006.
- _____.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2호, 2007.
- _____. “이명박 정부의 러시아 외교정책 평가 및 한·러 관계 발전전략.” 『국제문제연구』. 제9권 4호, 2009.
- _____. “북한·러시아 정상회담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성격 변화: 2000~2002, 2011년 정상회담 비교 분석.” 『시베리아 극동연구』. 제7호, 2011.
- _____.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18-3호, 2011.
- 이재영.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협력 방안.” 고재남·엄구호 엮음.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9.
- 최태강.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어제, 오늘, 내일.” 『신아세아』. 16권 2호, 2009.
-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정부, 극동지역 개발 본격화.” 『수은해외경제』. 2012.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 외국인투자 유입동향과 우리 기업의 투자전략.”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2012.
- _____. “한·러 경제교류 활성화 대책.”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2012.

Georgy Toloraya. "The Six Party Talks: A Russian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Vol. 32, No. 4, 2008.

_____. "The Korean Peninsula: Gateway to a Greater Role for Russia in Asia." *Global Asia*, Vol. 7, No. 2, Summer, 2012.

С.Басае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ГУЛАГ в Сибири."
 <<http://sarvarupa.livejournal.com>> (검색일: 2012.8.28).

И.Дробышева. "Корейский ориентир."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апитал*, No 1(41) январь 2004.

Л.Забровская.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КНДР в Россию (середина 1940-х~2003гг.),"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2003 г.

О.Иващенко. "Россия 2010~2020 – без Сибири?...(краткий прогноз на ближайшие десятилетия)."
 <<http://politics.in.ua/index.php?go=News&in=view&id=5315>> (검색일: 2006.10.16).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года."

3. 기타자료

『연합뉴스』. 2002년 8월 25일.
 _____. 2012년 3월 5일.

『로동신문』. 2008년 3월 21일.
 _____. 2008년 10월 5일.
 _____. 2011년 8월 15일.
 _____. 2011년 8월 25일.
 _____. 2011년 10월 14일.
 _____. 2011년 10월 21일.
 _____. 2011년 10월 23일.

『조선중앙통신』. 2008년 1월 26일.

RIA Novosti. December 11, 2006.
 _____. February 27, 2012.

Vedomosti. No. 19, February 6, 2006.

Бюллетен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 No. 4, 2001.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 8, 2000.
_____. No. 9, 2000.
_____. No. 9, 2001.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от 24 августа 2011.
_____. от 30 сентября 2011.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July 20, 2000.
Правда. August 22, 2002.
_____. August 23, 2002.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July 11, 2000.
_____. June 24, 2009.
_____. February 11, 2011.
_____. August 25, 2011.
_____. September 28, 2011.

<<http://druzbnarodov.ru/humanrights/271-2011-04-11-12-25-35.html>>
(검색일: 2012.9.9).

<<http://kremlin.ru/acts/785>> (검색일: 2012.8.29).

<<http://minenergo.gov.ru/activity/energostrategy/>>.

<<http://sarvarupa.livejournal.com/40234.html>> (검색일: 2012.8.28).

<<http://www.amic.ru/news/189474/>> (검색일: 2012.8.29).

<<http://www.dvforum.ru/>> (검색일: 2012.2.17).

<<http://www.emerics.org/posts/postPrint/1/1257131/HR.do>>
(검색일: 2011.4.22).

<<http://www.emerics.org/>> (검색일: 2011.4.22).

<<http://www.ln.mid.ru/>> (검색일: 2011.10.4).

<<http://www.inopressa.ru/article/>> (검색일: 2012.9.4).

<<http://www.kremlin.ru/acts/6197>> (검색일: 2012.8월 28).

<<http://www.korusforum.org/PHP/STV.php?std=57>> (검색일: 2007.12.4).

<<http://www.mintrans.ru/>> (검색일: 2012.2.17).

<<http://www.regnum.ru/news/435900.html>> (검색일: 2012.9.10).

<<https://www.platts.com/IM.Platts.Content/InsightAnalysis/IndustrySol>>

- utionPapers/espouupdate0510.pdf> (검색일: 2012.9.20).
- <<http://www.president.go.kr/k>> (검색일: 2008.6.2).
-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 (검색일: 2012.9.9).
- <<http://www.roszeldor.ru/search?query=2030>> (검색일: 2011.3.29).
- <<http://www.roszeldor.ru/search?query=2020>> (검색일: 2012.2.17).
- <<http://www.roszeldor.ru/>> (검색일: 2012.2.16).
- <<http://www.vneshmarket.ru/>> (검색일: 2012.9.4).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험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3,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논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 외	23,500원

기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 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인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연례정보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흥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규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채스민혁명기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P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이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n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통일연구원

www.kinu.or.kr



ISBN 978-89-8479-676-8